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이슈보고서 Vol.7

인사말

사회 이동성 복원과 국민통합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입니다.

우리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변변치 못한 여건에서 뛰어난 인물이 나온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담은 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이런 말에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4명 정도가 그 가능성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냉소적인 계급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평등주의 의식과 사회 이동에 대한 기대감이 강했습니다.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식들을 어떻게든 교육시키려고 애썼고, 젊은이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과들은 이러한 노력들이 응축되어 이뤄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재, 사회 이동 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풍부한 자원과 정보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부를 증대시키고 있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만큼의 자원과 정보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 이동이 어렵다는 것은 그 사회가 폐쇄적이고 역동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국민통합을 이루기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잠재역량 발휘나 지속가능한 성장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이동성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OECD에서도 사회 이동성을 사회통합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늦지 않게 사회 이동성 복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국민통합의 시대, 국민행복의 시대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활기차고 열린 사회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 이동이 활발하여 누구나 미래의 희망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한 광 옥

목 차

제1장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 이동성 증진 정책현황 및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 07

제2장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국가 간 비교 분석

가톨릭대학교 백승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 46

제1장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 이동성 증진 정책현황 및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이 글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사회 이동성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사업을 진단한 후 정책방향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였음

먼저 한국사회의 사회 이동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이어지는 세대 간 이동에 있어서 교육수준과 직업지위 모두 개방적인 방향보다는 폐쇄적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초직에서 현직에 이르는 세대 내 이동에 있어서도 과거세대에서 최근세대로 올수록 상승이동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사회 이동성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 이동성이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대학 등록금 완화 대책, 공교육 교육비 지원대책 등 계층 간 교육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정책들을 주로 살펴보았음. 그리고 사회 이동성 증진과 관련하여 현행 정책에 대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방향과 과제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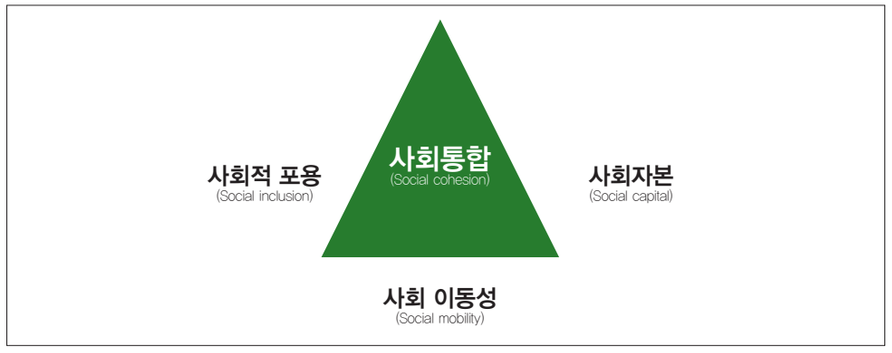
Ⅰ 서론

1. 논의 배경

■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회 이동성(social mobility)을 복원해 개방적인 사회(open society)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

-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개인들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배경과 관계없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실질적인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는 개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어떤 사회가 개방적인가, 폐쇄적인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사회 이동성임. 사회 이동성(social mobility)은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회경제적 위치로 옮겨 가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의 개방성 정도를 알려주는 주요 지표로 활용됨
- OECD(2011)에서는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 사회적 포용 정도, 사회 자본과 더불어 사회 이동성을 제시한 바 있음. 다양한 소외계층을 사회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며(social inclusion), 서로 간에 신뢰하고 배려를 할 줄 알며 공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social capital), 세대 간이나 세대 내에서 이동이 자유로울 때(social mobility) 사회적인 통합도가 높다는 것임

[그림 1] 사회통합의 세 가지 요소



※ 자료 : OECD(2011), p.54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이동성은 국민통합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 이동성의 정도와 추세를 통해 얼마나 우리 사회가 개방적인 사회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동시에 사회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사회 이동성은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맥락에서 기존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도달하는 데 있어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사회의 개방성 정도를 알려주는 사회 이동성은 어떤 이동인가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수직이동(vertical mobility)은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동을, 수평이동(lateral mobility)은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로 옮겨가는 이동 혹은 지리적 이동을 의미함. 두 가지 이동 중에서 사회의 개방성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수평이동보다는 수직이동임
- 수직이동은 상승이동(upwardly mobility)과 하강이동(downwardly mobility)으로 구분됨. 전자는 상위의 사회경제적 위치로 올라가는 이동을 후자는 하위의 사회경제적 위치로 내려가는 이동을 의미함. 유지는 상승이나 하강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 사회 이동성은 동시에 세대 간 이동(inter-generational mobility)과 세대 내 이동(intra-generational mobility)으로 구분됨. 전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회이동을 의미하며, 후자는 개인의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사회이동을 의미함

- 사회 이동성은 사회경제적인 위치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층이나 계급과 같은 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이동이 이루어지는가를 본다는 점에서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개념임
  -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 이동성은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 글에서는 사회 이동성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을 진단한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함

2. 논의의 목적과 주요 내용

■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의 사회 이동성의 정도와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이슈를 제시해 보고자 함

- 사회 이동성은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을 구분해,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사회 이동과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회경제적 위치를 바꾸어 가는지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사회경제적 위치는 교육 수준과 직업이라는 중요한 자원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함

■ 한국 사회의 사회 이동성의 정도와 추세를 살펴본 후, 사회 이동성과 관련된 정책을 진단해 보고자 함

- 사회 이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은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계층 간의 취업이나 직업이동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들이 포함될 수 있음
  - 전자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나 사교육 경감 대책과 교육비 및 대학 등록금 대책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후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격차 해소나 능력에 따른 취업(스펙초월 채용, NCS),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해소 등을 비롯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그런데 사회 이동성은 기본적으로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여기에서는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진단해 보고자 함

■ 마지막으로 사회 이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함

- 사회 이동성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들은 주로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제시해 보고자 함

Ⅱ 한국사회의 사회 이동성과 정책적 이슈

1. 소득불평등과 사회 이동성

■ 이 절에서는 사회 이동성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소득불평등의 추세를 살펴보고자 함. 이는 소득불평등과 사회 이동성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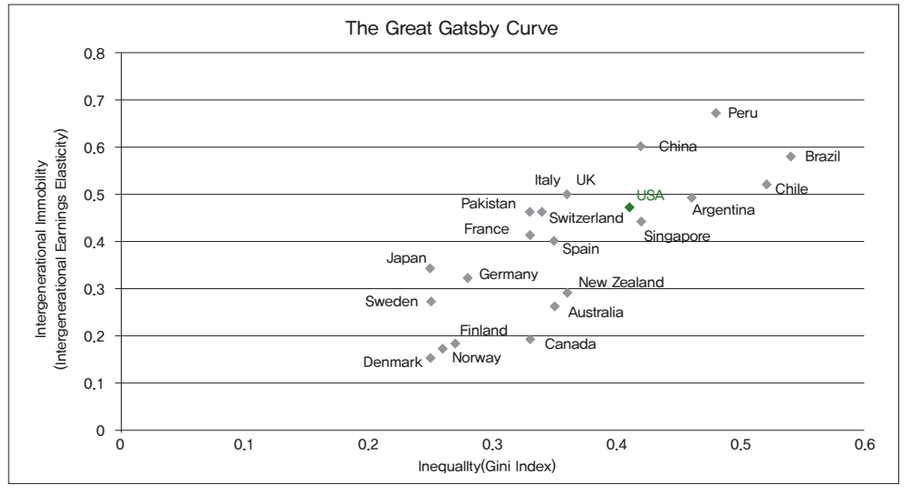
◎ 사회 이동성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위대한 개츠비 곡선(Great Gatsby curve)임

- 이는 Krueger(2012)가 미국 의회 연설에서 밝힌 것으로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 이동성 수준이 낮아진다는 주장임
- Chetty et al.(2014)은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 바 있음

◎ 여기에서 소득불평등도는 지니계수를 의미하며 사회 이동성은 아버지의 소득이 아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수값으로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을 의미함

-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줌
- 세대 간 소득 탄력성 역시 값이 클수록 가족배경의 영향이 커지는 것이므로 1에 가까울수록 사회 이동성이 폐쇄적이라는 것을 보여줌

[그림 2] 위대한 개츠비 곡선



※ 자료 : Krueger(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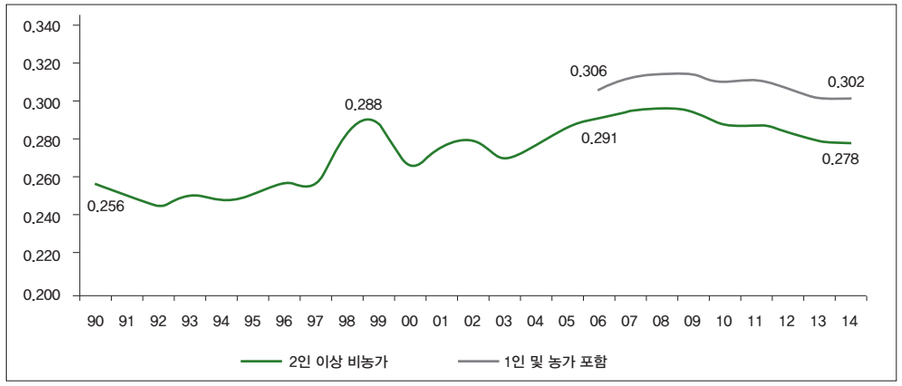
-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 이동성의 폐쇄성이 낮은데 반해서, 미국을 포함하여 페루, 브라질, 칠레 등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아메리카대륙 국가들은 사회 이동성의 폐쇄성이 높게 나타남

■ 그렇다면, 한국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사회 이동성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추정해 볼 수 있음

◎ [그림 3]은 소득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값의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의 지니계수 값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9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2006년부터 추정이 가능한 1인 및 농가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감소세가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처럼 소득불평등 수준이 악화되었다면 사회 이동성도 점차 폐쇄적으로 바뀌었을 개연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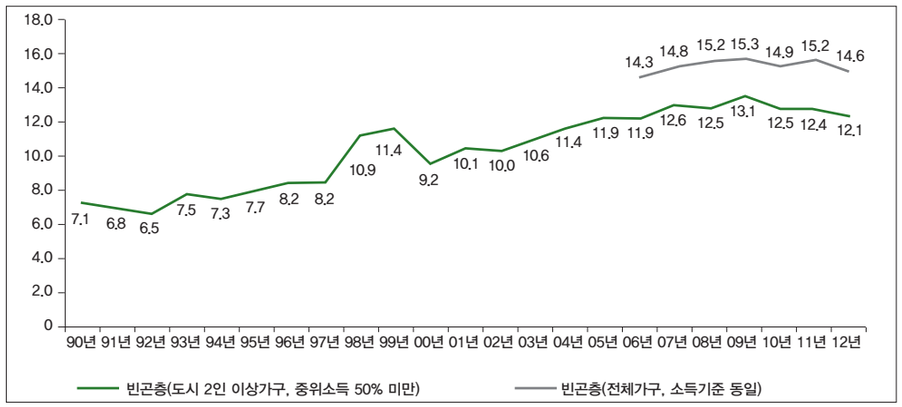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의 지니계수 변화 추세(1990–2014년)



※ 자료 : 박소현 · 안영민 · 정규승(2013)
출처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

- 소득불평등과 함께 빈곤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의 비중을 의미하는 상대빈곤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7%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해 12%를 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1인가구 및 농가를 포함한 전체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4% 이상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 한국의 상대빈곤율 변화 추세(1990–2012년)



※ 자료 : 박소현 · 안영민 · 정규승(2013)
출처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소득 격차에 대해 높은 임금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10개의 구간(분위)으로 구분하고 최상위 10%와 최하위 10%, 최상위 10%와 중간 10%, 중간 10%와 최하위 10%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OECD, 2014)

- 〈표 1〉은 소득 최상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 간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2년 4.19배에서 2012년 4.71배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남
  -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칠레 등 소득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나는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임

[표 1] 2002년–2012년 OECD 국가별 소득 격차

(단위 : 배)

	9분위/1분위		9분위/5분위		5분위/1분위	
	2002년	2012년	2002년	2012년	2002년	2012년
캐나다	3.65	3.72	1.83	1.90	1.99	1.95
칠레	5.21	4.38	3.13	2.92	1.67	1.50
덴마크	2.57	2.86	1.62	1.67	1.59	1.71
프랑스	3.03	2.97	2.00	1.99	1.51	1.50
독일	3.07	3.26	1.74	1.84	1.77	1.77
이탈리아	2.56	2.32	1.64	1.53	1.56	1.52
일본	2.97	2.99	1.83	1.85	1.62	1.61
한국	4.19	4.71	2.07	2.29	2.02	2.08
멕시코	3.75	3.67	2.14	2.20	1.75	1.67
노르웨이	2.10	2.36	1.45	1.48	1.45	1.60
스페인	3.55	3.08	2.10	1.88	1.69	1.65
영국	3.54	3.55	1.95	1.98	1.81	1.79
미국	4.66	5.22	2.26	2.44	2.06	2.14
OECD 평균	3.44	3.38	1.98	2.02	1.72	1.67

※출처 : OECD(2014)

- 「21세기 자본(Le Capital Au XXIe SIÈCLE)」을 발표한 Piketty는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연구자들과 함께 세계 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World Top Income Database)를 제공하고 있음
  - 이는 조사자료가 아닌 납세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 불평등도를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국가별로 상위 1%, 5%, 10%의 전체 소득 점유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표 2] 주요 국가별 상위 1% 소득 점유율 변화 추이(1995년–2012년)

(단위 : %)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한국	6.88	7.27	7.49	6.58	7.55	8.19	8.55	9.16	9.22	9.64	9.96	10.78	11.28	11.37	11.33	11.76	12.25	12.23
미국	13.53	14.11	14.77	15.29	15.87	16.49	15.37	14.99	15.21	16.34	17.68	18.06	18.33	17.89	16.68	17.45	17.47	19.34
영국	10.75	11.90	12.07	12.53	12.51	12.67	12.71	12.27	12.12	12.89	14.25	14.82	15.44	–	15.42	12.55	12.93	–
일본	7.30	7.36	7.32	7.59	7.76	8.22	8.60	8.73	8.92	9.29	9.42	9.62	9.64	9.71	9.56	9.51	–	–
프랑스	7.70	7.73	7.77	7.94	8.15	8.29	8.43	8.46	8.55	8.73	8.73	8.94	9.25	8.80	8.08	–	–	–
독일	8.84	–	–	10.88	–	–	–	–	–	–	–	–	–	–	–	–	–	–
이탈리아	–	–	–	8.74	8.82	9.09	9.28	9.28	9.36	9.28	9.35	9.72	9.86	9.66	9.38	–	–	–
덴마크	5.03	5.12	5.24	5.40	5.47	5.73	5.62	5.55	5.50	5.57	5.78	5.91	6.12	6.05	5.44	6.41	–	–
캐나다	9.97	10.49	11.26	11.78	12.03	12.78	12.70	12.35	12.28	12.65	13.09	13.71	13.72	13.06	12.29	12.22	–	–

※출처 : World Top Income Database(http://topincomes.parisschoolofeconomics.eu)

- 〈표 2〉는 상위 1% 소득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한국은 1995년 6.88% 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7%를 넘어섰으며 2010년 이후로 12%를 보여주고 있음
- 소득불평등 추세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사회 이동성 수준이 점차 폐쇄적으로 옮겨 갔을 개연성이 있음을 말해줌.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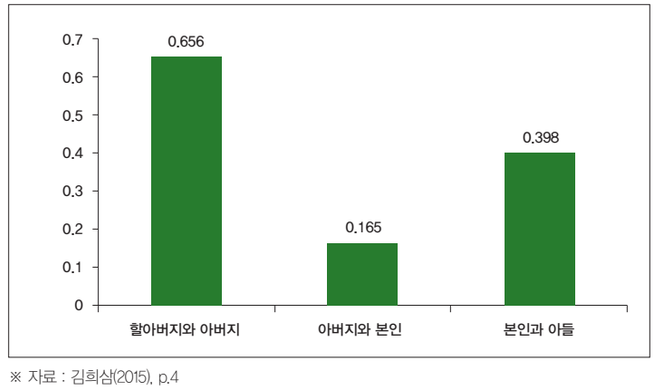
2. 한국 사회의 사회 이동성 실태

■ 이 절에서는 한국 사회의 사회 이동성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사회 이동성 실태는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을 구분해 살펴보고자 하며 교육수준과 직업지위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함

■ 먼저 세대 간 이동과 관련하여 부모에서 자녀로 교육수준의 이동 양상이 어떤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김희삼(2015)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서 본인, 마지막으로 본인과 아들로 이어지는 4대에 걸친 교육수준 이동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바 있음

[그림 5] 4대에 걸친 교육 수준 세대 간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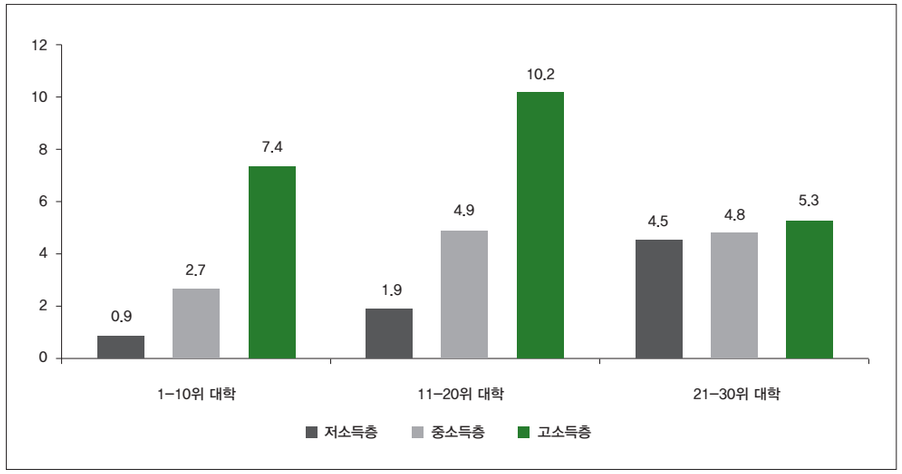
※ 자료 : 김희삼(2015), p.4

- [그림 5]는 4대에 걸쳐 교육수준 간의 상관계수를 제시하고 있음. 이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실시한 "2013년 행복연구" 조사 결과이며 20세에서 69세의 성인 남성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음
- 먼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상관계수값은 0.656로 높았으나 아버지와 본인의 상관계수값은 0.165로 크게 낮아짐. 이러한 결과는 가족배경의 영향이 줄어든 것으로 한국 사회가 점차 개방적인 사회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 그런데 본인과 아들의 상관계수값은 다시 0.398로 증가함. 김희삼(2015: 4)은 이러한 경향을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본인에 이르러 낮아졌으나 다음 세대에서 다시 높아지는 U자형 추세를 보여준다고 지적함
-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가 개방적 사회에서 다시 폐쇄적 사회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가구 소득계층별로 대학 진학률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재확인할 수 있음

- 오호영 · 이정수(2015)는 교육고용패널자료를 이용해 가구 소득계층별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의 차이를 살펴본 바 있음. [그림 6]은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여기에서 소득계층의 구분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이용해 중위소득의 2/3 미만인 가구를 저소득층으로, 2/3 이상에서 4/3 이하인 가구를 중소득층, 마지막으로 4/3 초과인 가구를 고소득층으로 구분함. 상위권 대학 여부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를 활용함

-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10위권 대학의 진학률에 있어서 저소득층은 0.9%에 그쳤으나 고소득층은 7.4%로 고소득층의 진학률이 8.6배나 높게 나타남. 11-20위권 대학의 경우도 저소득층은 1.9%에 그쳤으나 고소득층은 10.2%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차이가 5.3배로 나타남

[그림 6] 가구 소득계층별 대학 진학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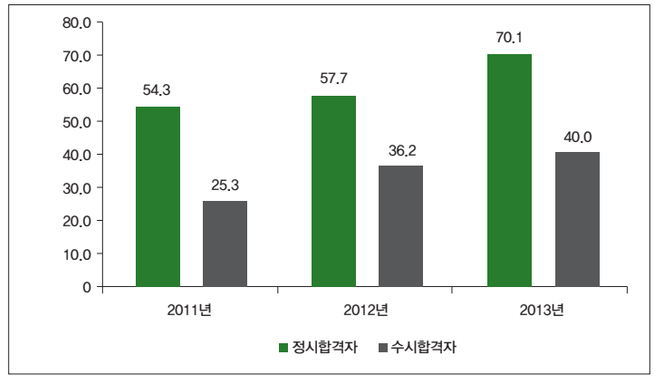


※ 자료 : 오호영 · 이정수(2015), p.291

- 대학을 보다 좁혀 서울대학교 합격자를 놓고 볼 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득수준에 따른 자료를 얻기 어려우므로 주로 부유층이 거주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의 3구 학생들이 전체 합격자 중 어느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유기홍 의원실(2013)의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정시합격자의 70.1%가 강남 3구 출신이며 수시합격자의 비율도 40.0%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7] 강남3구 서울대학교 합격자 비율(%)



※ 자료 : 유기홍의원실(2013)

- 강남 3구 학생들의 합격자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3년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점차 강남 3구 출신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1년 강남 3구의 정시 및 수시 합격자 비율은 각각 54.3%, 25.3%였으나 2013년 70.1%, 40.0%로 증가함.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대학 진학률이 크게 증가했지만 상위권 대학을 놓고 볼 때 계층 간 교육 격차가 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황임을 말해줌

- 이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육수준에 있어서 세대 간 이동이 점차 개방적인 방향으로 이동했다기보다는 폐쇄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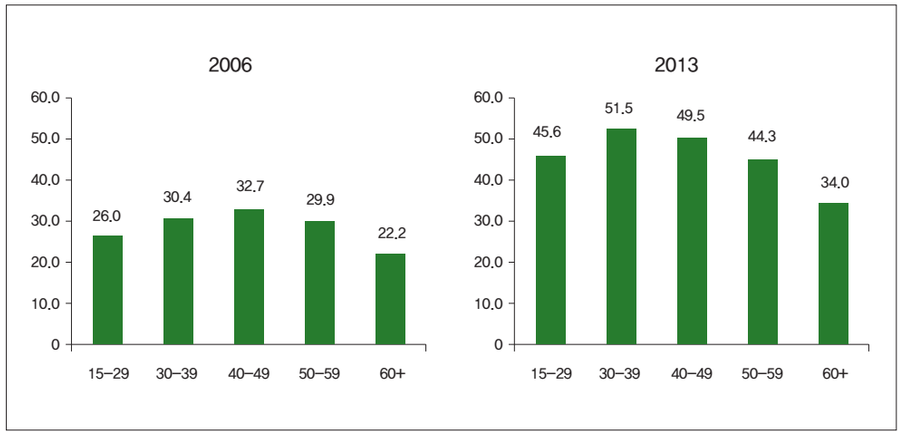
이어서 직업지위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해 본 세대 간 이동의 현황과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주관적인 응답결과를 토대로 세대 간 이동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는 본인 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음

◎ 응답 결과 중 세대 간 상승이동 가능성이 낮다(비교적 낮다+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중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이동에 대한 비관적인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젊은 층의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남. 청년층(15-29세)의 응답비중은 2006년 26.0%였으나 2013년 45.6%로 무려 19.6%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21.1%p로 크게 증가함. 반면 40대는 16.8%p, 50대는 15.4%p, 60대는 11.8%p로 연령계층이 올라갈수록 비관론의 증가폭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여줌

[그림 8] 다음 세대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응답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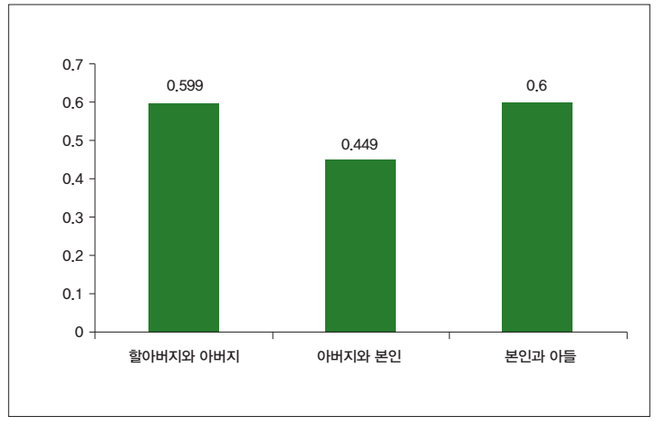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06, 2013).

◎ 앞서 교육수준에 이어 김희삼(2015)이 분석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4대에 걸친 사회 이동성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여기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해당 가족이 중년(40-50세)인 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세대 전체 한국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위치로 응답자가 10점 척도로 평가한 수치를 나타남

◎ 이 역시 교육수준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관계수 값은 0.599였으나, 아버지와 본인의 그것은 0.449로 낮아짐. 반면 본인과 아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관계수 값은 0.60으로 다시 높아져 U자형 곡선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9] 4대에 걸친 사회경제적 지위 세대 간 상관계수 추이



※ 자료 : 김희삼(2015),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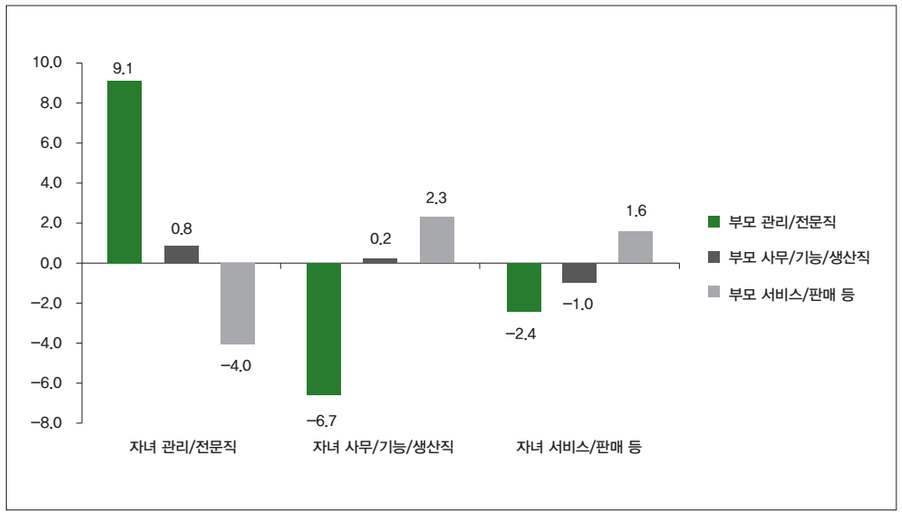
◎ 최근 세대 간 직업계층 이동성을 분석한 최은영 · 홍장표(2014)의 결과도 사회 이동성이 계층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음

- 이 연구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 직업지위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별로 3개의 직업군으로 구분해 부모에서 자녀로의 계층 이동성을 살펴보고 있음. 첫 번째는 관리직과 전문직이, 두 번째는 사무직과 기능직, 생산직이, 세 번째는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직, 단순노무직이 포함됨

◎ [그림 10]은 세대 간 직업지위 이동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적인 이동 분포를 33.3%로 볼 때 평균 분포와의 차이를 통해 계층 간 직업이동의 격차를 제시하고 있음

- 부모가 관리직과 전문직일 때 자녀가 관리직과 전문직인 경우는 평균 분포에서 9.1%나 높았으나 부모가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직, 단순노무직일 때 자녀가 관리직과 전문직군인 경우는 평균 분포보다 4.0%p나 낮게 나타남.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음
- 반면 부모가 관리직과 전문직군일 때 자녀가 사무직과 기능직, 생산직일 경우는 6.7%p나 낮게 나타났으나 부모가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직, 단순노무직일 때 그것은 2.3%p로 높게 나타남

[그림 10] 세대 간 직업지위 이동 평균 분포에서의 편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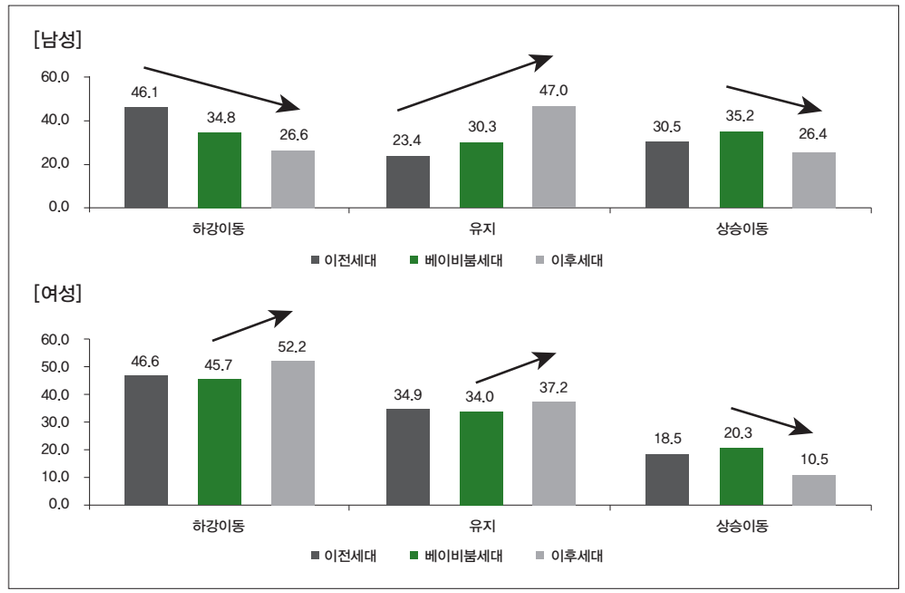


※ 자료 : 최은영 · 홍장표(2014), p.62

■ 이어서 여기에서는 세대 내 이동 결과를 살펴보고자 함. 세대 내 이동은 생애에 걸친 이동과정이므로 교육수준을 다루지 않고 직업지위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함

- 김기헌(2015)은 세대 내 이동과 관련하여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와 전후 세대(1946–54년생, 1964~1972년생)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 바 있음
  - 이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2008–2011년)를 활용하였음. 여기에서 직업지위는 Erikson과 Goldthorp가 제안한 EGP 분류를 활용하였으며 EGP 분류를 직업분류 코드값으로 전환한 Ganzeboom & Treiman(1996)의 연계표를 활용하였음. 6개의 직업범주는 서비스계급(전문직, 자본가 등), 사무직 노동자, 쁘띠 부르조아(자영업자), 농민, 숙련 육체노동자, 비숙련 육체노동자 등임
- [그림 11]은 사회이동표를 기준으로 초직과 현직의 유지, 상승, 하강 비율을 제시하고 있음
  - 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최근 세대로 올수록 상승이동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됨. 결국 이 결과는 세대 내 이동에 있어서 개방성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11] 베이비붐 세대와 전–후 세대의 초직과 현직 사회이동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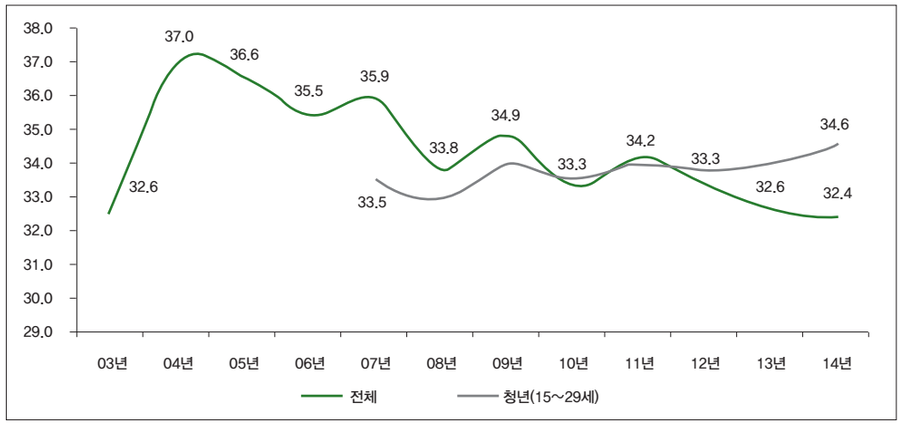


※ 자료 : 김기헌(2015), p.20

- 세대 내 이동과 관련하여 상승이동이 약화된 것은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비정규직 증가나 최근 세대일수록 승진이나 다른 좋은 직업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한계직(marginal job)이 증가한 것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비정규직에 관한 조사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의 개념을 합의한 이후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를 통해 추세를 살펴볼 수 있음
- 비정규직은 2002년 이전 자료가 존재하지 않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
  - 통계청 조사가 실시된 후 추세를 보면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고 추세를 보여줌.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노동부는 2004년 9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하였으며 논란 끝에 2007년 7월 동법이 시행되었음. 이 법안을 통칭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불리는데,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업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 2년을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림 12] 전체 임금노동자 및 청년층 비정규직 추세(2007-2014,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7년부터 3월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시계열 차원에서 8월 조사를 기준으로 제시함.

-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체 비정규직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청년층의 비정규직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2011년 이후 전체 비중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임

3. 사회 이동성 저하에 따른 정책적 이슈

■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사회 이동성 역시 개방적인 방향에서 폐쇄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

- 사회 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소득불평등 완화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소비 증대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방법과 조세제도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확대하는 방법, 그리고 감소 추세에 있는 중산층을 확대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첫 번째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이나 기본소득(basic income)의 도입과 같이 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있음
- 두 번째 부분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세금을 걷는 간접세보다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간접세를 늘리는 것과 같은 소득재분배 방안 등을 말함
- 세 번째 부분은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비나 주거비 등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임
- 한편, 이와 같이 소득불평등을 낮추는 정책들은 주로 결과의 평등 문제와 연관되는데 사회 이동성 문제는 주로 기회의 평등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관련하여 교육기회의 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함

■ 사회 이동성 복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적인 지원은 같은 출발선상에서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계층 간의 교육기회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사회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교육비 부담이 크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높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 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육기회의 평등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층 간 교육기회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함
- 한국사회가 보다 개방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해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특히 통합적인 사회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사회 이동성에 있다는 점에서 계층 간 교육기회의 격차 해소는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다음 절에서는 기회의 평등과 관련하여 교육기회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 정책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함

Ⅲ 사회 이동성 복원 관련 정책현황 진단

1. 사교육비 경감 대책

■ 이 절에서는 사회 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실태와 각종 지표를 통해 정책현황을 진단해 보고자 함. 특히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볼 것이며 우선 사교육비 경감 대책부터 다루어 보고자 함

-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참여정부에서 시작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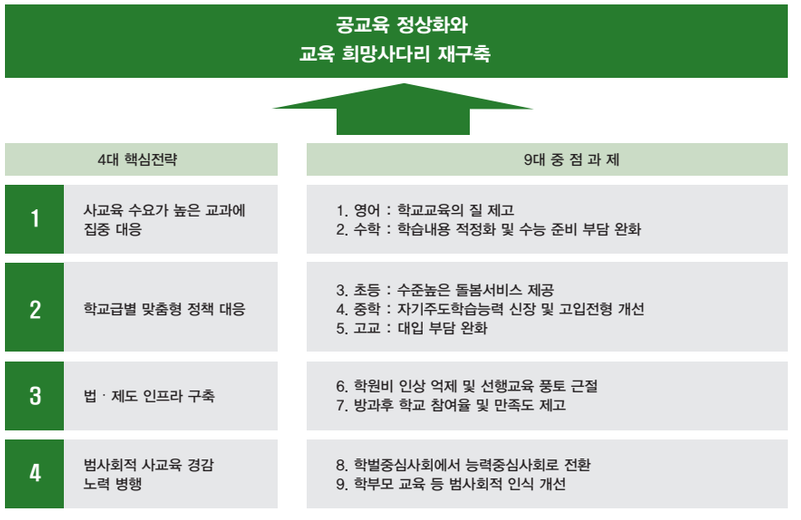
- 박근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는 2014년 12월에 발표한 교육부의「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 있음
  - 사교육 대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정책 비전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희망사다리 재구축"을 제시하고 있으며 4대 핵심전략으로 ①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에 집중 대응, ②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 ③ 법 · 제도 인프라 구축, ④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 병행 등임

- 사교육 대책에서 사회 이동성과 관련된 중점과제는 비전 내용과는 달리 잘 드러나지 않음.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사교육 대책은 주로 계층 간 격차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공교육의 정상화, 선행학습 근절, 대입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세부적인 9대 중점과제 중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연관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2번째 핵심전략인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에서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제시하고 있음
  - 돌봄서비스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측면이 맞물려 있는 정책사업임
  -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사업들은 지역 돌봄 기관(초등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들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마지막으로 돌봄교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 이 사업은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맥락을 담고 있으나 정책 방향 자체는 정책 추진의 효율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2번째 핵심전략인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에서 대입부담 완화 역시 사회 이동성 복원과 연관된 정책임
  - 다만, 이 중점과제에서 부담의 의미는 경제적인 수준에 따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시험의 난이도나 대입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곧 대입 전형의 사전예고 기간을 늘린다거나 학생부 전형 중심으로 대입전형체계를 확립하고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등을 정책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4번째 핵심전략인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 병행 중 학벌중시사회에서 능력중시사회로의 전환이 사회 이동성 복원과 연관된 정책임
  - 이 역시 직접적으로 계층 간 격차 해소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여기에서는 대학구조개혁으로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선취업 후진학 확대, 학력보다는 직무능력을 우선시 하는 채용관행 변화 등을 정책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비전에서 희망사다리 재구축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 이동성 복원의 맥락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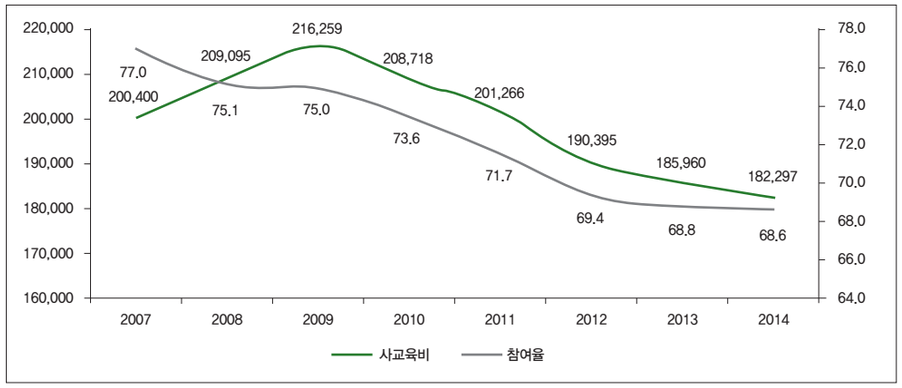
[그림 13]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기본방향



※ 자료 : 교육부(2014), p. 6

- 그렇다면, 사교육 현황은 어떠한가. 사교육 참여율은 통계청에서 「사교육비조사」를 실시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77.0%에서 68.6%까지 낮아짐
  - 가계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 총액 역시 2007년 20조 4백억 원에서 2009년 21조 6천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2014년 현재 18조 2천억 원으로 감소하였음
-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사교육비를 낮추는 데 있기 때문에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추세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사교육비 대책이 부분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런데 전반적인 사교육 참여가 줄었지만 계층 간의 차이가 지속된다면 같은 출발선상에서 위대한 평등자로 교육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성과평가 시 계층별 격차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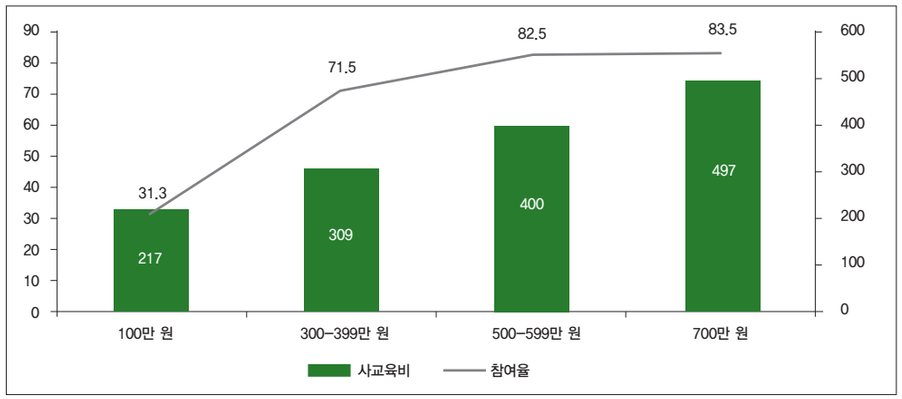
[그림 14]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추이(억원, %)



※ 자료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KOSIS 자료 인출

- [그림 15]는 소득계층별로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가구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교육비는 21만원인데 비해서 700만 원 이상인 경우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사교육 참여율도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31.3%인데 비해 고소득층은 83.5%로 3배 가까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5] 소득계층별 1인당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천원, %)



※ 자료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2013)

■ 지금까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살펴본 결과, 계층 간 격차 해소라는 사회 이동성 복원보다는 공교육 정상화나 대학입시 부담 완화 등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이 결과는 향후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계층 간 교육 격차해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2. 대학 등록금 완화 대책

■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함께 교육영역에서 사회 이동성 복원과 관련된 정책은 대학 등록금 경감대책이 있음. 대학 등록금 경감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진단해보면 다음과 같음

- 이명박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건 후 본격적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대책이 추진되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 중임
- 대학등록금 문제가 대통령 선거의 대표적인 공약 사항으로 제시된 이유는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등록금 수준뿐만 아니라 매우 빠른 속도로 등록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임

[표3] 한국의 사립대 및 국 · 공립대 등록금 변화 추이

(단위 : 천원)

	사립대		국 · 공립대	
	실질금액	물가보정	실질금액	물가보정
1980년	671	2,765	344	1,417
1985년	1,158	3,287	737	2,092
1990년	1,627	3,653	943	2,117
1995년	3,234	5,373	1,547	2,570
2000년	4,511	6,171	2,193	3,000
2005년	6,068	7,044	3,115	3,616
2010년	7,531	7,531	4,190	4,190
2011년	7,691	7,395	4,291	4,126

※ 주 : 2010년을 100으로 할 때의 소비자 물가지수임. 이에 대한 출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임(http://ecos.bok.or.kr/).
출처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 1980년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7만 원, 국공립대학은 34만 원이었는데 2010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해 현재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각각 276만 원과 142만 원에 해당함. 2010년 등록금은 사립대의 경우 753만 원, 국공립대학의 경우 419만 원으로 얼마나 등록금 부담이 커졌는지를 알 수 있음
  -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은 평균 8%로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임. 등록금 인상이 이처럼 상식 밖으로 올라간 것은 직접적으로 1989년 이루어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2003년 이루어진 국공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 때문임

- 이처럼 빠른 속도로 증가한 등록금을 완화하는 대책 중 가장 가시적인 결과는 2011년 여야 합의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합의해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임
  - 그런데 이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으나 현행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과는 거리가 있음

- 교육부(2013)에서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제시됨. 이 정책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2013년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고 소득분위별로 지원하는 금액도 상향(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1분위는 450만원, 소득 2분위는 60%, 소득 7-8분위는 15% 등)하는 내용을 제시함
  - 이어서 장학금 성적 기준 폐지, 다자녀 가구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이 제시됨. 다른 한편, 든든학자금(ICL) 대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실질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됨

- 추가적으로 제시된 박근혜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은 2015년도에 제시된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임(교육부, 2015a)
  - 이 방안에서는 국가장학금 3.9조 원과 대학자체 노력 3.1조 원 등 7조 원의 재정 투자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임. 여기에서 반값 등록금은 전체 등록금 총액의 50%로 2011년 등록금 총액이 14조 원임을 고려해 50%를 낮춘다는 의미로 사용함

- 장학금 첫 번째 유형(I유형)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1인당 연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며, 두 번째 유형(II유형)은 대학 자체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장학금 확충을 유도하여 5,000억 원을 마련하는 대학자체노력 연계 장학금이고, 다자녀 유형은 셋째 아이를 가진 다자녀 가구에 2학년까지 2,000억 원을 지원하되 소득 8분위 이하를 조건으로 하고 있음
  - 2015년 바뀐 부분은 최대 장학금 지원액이 30만원 인상된 점과 다자녀 가구의 지원 대상을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한 점임

[그림 16] 교육부의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구조

※ 자료 : 교육부(2015a), p. 3

- 4년제 대학등록금을 중심으로 인상률 추세를 살펴보면, 2008년까지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보다 높았으나 2009년부터 물가인상률보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2년 대학등록금 완화 대책이 추진된 후 인상률이 마이너스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대학 등록금이 매우 높은 수준이나 더 이상 등록금 부담 정도가 커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긍정적임

[표4] 4년제 대학등록금 추이

(단위 : 만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립대학	금액	312	343	384	417	419	431	435	411	411	409
	인상률	7.3	10.0	10.2	8.7	0.5	2.4	0.9	−5.4	0	−0.3
사립대학	금액	607	647	692	738	741	753	769	739	736	733
	인상률	5.1	6.6	6.5	6.7	0.5	1.6	4.0	−3.9	−0.4	−0.3
물가 상승률		2.8	2.2	2.5	4.7	2.8	3.0	4.0	2.2	1.3	1.3

※ 출처 : 한국장학재단
4년제 대학 1년 기준임. 국립대는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합산한 금액

- 그렇지만 한국의 등록금 수준이 여전히 매우 높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OECD(2014)가 발표한 최근 교육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많은 국가들에서 고등교육 재정 감축을 추진해 대학 무상교육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북유럽 국가들의 국 · 공립대학은 대학 등록금을 받고 있지 않으며 멕시코와 폴란드, 슬로베니아도 국 · 공립대학의 등록금이 없는 나라임
  -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 중 슬로바키아와 영국을 제외하고 미국 달러로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환산해 내국인 전일제 학생의 등록금이 1,500불 이상인 곳은 없음.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곳도 1,500불을 넘지 않음

- 그런데 한국을 포함하여 칠레, 일본, 미국 등 4개 국가들은 국 · 공립대학들의 등록금이 5,000불 이상임
  - 사립대의 경우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비교가 용이하지 않은데 결과가 제시된 국가들을 살펴보면, 한국은 9,000불 이상으로 미국,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호주 등 10,000불이 넘는 4개 국가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줌

- 대체로 대학 등록금이 높은 국가들은 이를 보조하기 위해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공공보조 등의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기 마련임.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높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지원 수준이 높은 편인가?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음
  - OECD(2014)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은 공공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무려 74%에 이르며 등록금이 가장 비싼 미국은 29%, 높은 대학 등록금을 보여주고 있는 칠레나 호주도 38% 수준이며 일본 역시 30%로 등록금이 비싼 국가들일수록 공공지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한국은 전체 고등교육 학생들 중에서 공공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9%로 37개 국가들 중에서 6번째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보다 낮은 공공지원 비율을 보여주는 국가들은 멕시코나 프랑스, 스위스 등 국 · 공립대학의 등록금이 없는 곳이어서 한국이 얼마나 열악한 수준인가를 알 수 있음

- 이처럼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국제적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장학금 등을 통해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등록금 부담을 덜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표5]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 현황

(단위 : 억원, 건,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출잔액	11,609	28,832	40,733	42,979	43,377	40,700
연체금액*	400	1,188	2,627	2,891	2,303	1,905
연체인원	10,770	27,450	55,571	58,956	50,203	42,792
연체율(%)	3.45	4.12	6.45	6.73	5.31	4.68

※ 출처 : 한국장학재단
연체금액 : 연체계좌의 대출잔액 기준이며 부실채권(기한이익상실 채권) 제외 2015년 4월말 기준. 정보보증부 대출잔액은 약 8,600억원 임

- 다른 한편,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학자금 대출로 인해 연체를 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학자금 대출 인원은 2010년부터 한 해 70만 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체 인원도 크게 증가해 2010년 1만 명에서 2014년 4만 명으로 늘어남. 이는 가난의 대물림을 보여주는 결과여서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김재진(2014)은 대학알리미 자료를 분석해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분할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분석한 바 있음
  - 〈표 6〉은 신용카드 납부 이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학교 중 카드 납부를 받고 있는 대학은 38% 수준이며 이용학생 수는 등록학생 중 6%에 그치고 있음. 전문대는 좀 더 낮아 각각 30%, 1% 수준을 보여줌

- 대학이 등록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꺼리는 이유는 가맹점 수수료 때문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납부방식 도입도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해 줌
- 교육부는 2015년부터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공시제도를 도입해 추진 중이나 2015년 현재 카드납부 이용률은 2%를 넘지 못하고 있음

[표6]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현황

(단위: 개교, 명, 백만원)

구분		대학교			전문대		
		학교수	등록학생수	등록금 합계	학교수	등록학생수	등록금 합계
전체		199	1,597,321	9,595,707	166	500,973	2,887,743
구분		학교수	이용학생수	이용금액	학교수	이용학생수	이용금액
카드 납부	총합	76	92,647	78,479	50	7,132	13,248
	(%)	(38.19)	(5.80)	(0.82)	(30.12)	(1.42)	(0.46)

※ 주 : 1. 본교 기준(4년제 대학교 결측 1개교) 2. 4년제 대학교 중 광주가톨릭대학교 제외, 전문대학 중 한국농수산대학 제외
3. 등록금 합계=Σ(학생 1인당 등록금('13)×재학생 수('13)) / 입학금은 제외된 금액임
자료 : 대학알리미
출처 : 김재진(2014), P. 14

■ 대학 등록금 완화 대책은 이미 너무 큰 액수로 등록금이 오른 상태에서 현행 상태를 유지하거나 장학금 등을 통해 분담을 더는 방식으로 진행 중으로 반값 수준은 아니어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임

3. 공교육 교육비 지원 대책

■ 이 절에서는 마지막으로 공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책을 살펴보고자 함. 공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무상급식에서 출발해 무상보육까지 확대되어 왔는데, 여기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출발 당시에 제시한 공교육 교육비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실태와 성과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진단을 해보고자 함

◎ 박근혜 정부의 공교육 교육비 지원대책은 출범 당시인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교육부, 2013)

-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은 교육비 걱정 없는 유 · 초 · 중등교육 실현으로 ①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공교육 기능 강화, ②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③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임

◎ 2015년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현재 추진 실적 및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교육부, 2015b)

-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의 비전은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 인재 양성"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사회 이동성 복원과 관련된 정책전략은 "안전한 학교, 고른 교육기회"로 제시되어 있음

[그림17]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기본방향

※ 자료: 교육부(2015b), p. 6

-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은 2013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안전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정책 전략에 있어서도 안전한 학교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안전한 학교, 고른 교육기회 정책 전략의 성과지표는 총 4가지로 ① 학업중단율, ② 등록금 부담 경감률, ③ 유치원 CCTV 설치율, ④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등임
  - 이 중에서 사회 이동성 복원과 관련된 것은 등록금 부담 경감률 정도로 2014년 48%에서 2015년 50%(2016년과 2017년은 50%로 동일)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안전한 학교, 고른 교육기회 정책 전략 중 사회 이동성 복원과 관련된 정책과제는 교육비 부담 경감과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유아교육 등임
  - 2013년 출범 당시에는 ①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공교육 기능 강화, ②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③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이었는데 2015년 계획에는 내용이 다소 변경됨
- 우선 세 가지 핵심과제에 포함되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가 제외됨
  - 2013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는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2014년부터 읍 · 면 · 도서지역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지역 신입생부터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
  - 그런데 2015년 업무계획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제외됨.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읍 · 면 · 도서지역 고교 학비지원 예산(2,461억여 원)이 정부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물론 이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김태년 의원실(2015)에 따르면, 고등학교 수업료를 못 내는 학생은 매년 7,000명 이상이며 3년간 미납액은 167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동시에 미납자 수는 줄고 있으나 1인당 미납액은 계속 증가해 개인당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7]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 학생수 및 미납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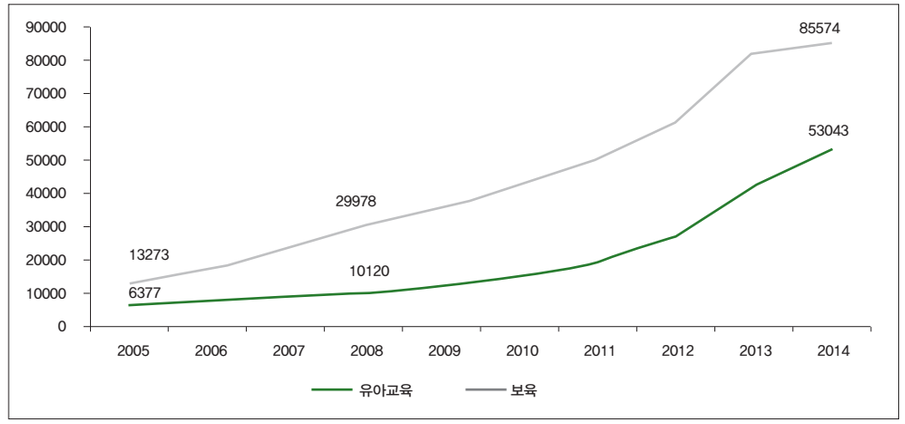
(단위 : 명, 천원)

회계년도	미납자수	미납액	1인당 미납액
2012년	9,023	5,346,560	592
2013년	7,762	5,799,503	719
2014년	7,020	5,577,935	826

※ 출처 : 김태년 의원실(2015)

- 2015년 초 · 중등교육 단계에서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으로는 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강화, ② 선행출제 금지를 통한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 경감, ③ 학원비 공개 확대 및 선행학습 요인 유발 학원 특별 관리, ④ 유아대상 영어학원 학원비 인하 유도 등이 제시됨
  - 이는 대부분 정부 재정지원이라기보다는 제도 운용 효율화나 관리 · 감독 강화를 통한 예산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임
-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복지정책은 보육 및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임. 이는 사회 이동성 복원과 관련성이 높으며 교육투자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동 시기에 이루어지는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예산 투자 확대가 이루어진 분야로 유아교육 총예산은 2014년 현재 53,043억 원, 보육예산은 85,574억 원에 이르고 있음. 이는 2005년에 각각 6,377억 원과 13,273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수준임

[그림 18]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 변화 추이(1995-2014, 억원)



※ 출처 : 육아정책연구소(2014), 유아교육 · 보육통계

- 현재 유아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어린이집 지원예산이 포함되며 보육예산은 국고지원 보육 사업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이 포함됨

- 그런데 2013년부터 3~5세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예산 배분 문제로 2014년부터 누리과정 운영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되는데 세수 부족으로 내국세가 적게 거치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20.27%)을 할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임
  - 2013년 실제 교부금은 40조 5,000억 원으로 정부 예측치보다 1조 가량 부족했으나 2014년도에는 4조 원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보육대란" 등으로 불리며 큰 논란을 야기함

■ 공교육 교육비 지원 정책은 영유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업 추진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었으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 이 밖에 교육비 지원 사업들은 정부재정지원이라기보다는 제도 운용 효율화나 관리 · 감독 강화를 통한 예산 절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임. 재정 운용과 관련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설정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 이 글에서는 국민통합의 중요한 요소인 사회 이동성 실태를 살펴보고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진단해 봄

- 사회 이동성은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맥락에서 기존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가의 여부가 중요함
- 동일한 출발선에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분야와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봄

■ 먼저 사회 이동성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본 결과,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어 오면서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 모두에서 개방적인 방식보다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먼저 세대 간 이동과 관련하여 교육수준을 통해 본 대물림 현상은 최근 들어 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상위대학 진학을 통해 볼 때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직업지위로 본 대물림 현상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상승이동의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세대 내 이동을 살펴본 결과 초직에서 현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최근 세대일수록 상승이동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승진 기회나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사회 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진 실적이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함

-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계층 간 격차 해소를 통한 희망사다리를 놓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공교육 자체의 정상적인 운영과 입시부담 완화라는 맥락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사교육비 감축보다는 교육격차 완화가 더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교육 자체는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교육 경험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지난 15년 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 영역이었으나 향후에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짐. 대신 계층 간 격차를 완화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대학 등록금 완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이 없는 선진 국가들이 여전히 많고 등록금 인상률이 낮아졌으나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대학재정 지원사업들은 대학 구조조정과 맞물려 추진 중에 있는데 향후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방향을 국공립대와 대학원 지원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국공립대가 늘어나거나 정원이 확대된다면 대학 등록금 인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됨
  -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포괄하여 학부가 아닌 우수한 대학원에 관한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지원 대상의 범위가 좁혀지고 대학이 새로운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됨
- 공교육 교육비 지원 대책들은 보육 및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교육비를 절감하여, 돈이 없어서 공부하는 데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이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과도 맞물려 매우 중요하지만, 보육 및 유아교육 중심으로 재정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 생애주기별 균형 있는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 특히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고등학교 수준까지 의무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 과제로 추진해 왔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역시 정책추진 로드맵을 다시 명확하게 수립하여 구체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교육부. 2013.「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2013년 국정과제 실천 계획」. 서울: 교육부.
- 교육부. 2014.「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5a.「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5b.「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세종: 교육부.
- 김기헌. 2015.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연령코호트 간 비교." 2015년 제2차 사회통합포럼-사회이동과 사회통합(2015. 7. 22.) 발표문.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재진. 2014.「대학등록금 납부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태년 의원실. 2015.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자 매년 증가하는데, 고교무상교육 공약은 폐기?." 보도자료. 9월 8일자.
- 김희삼. 2015.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FOCUS 통권 제54호.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남기곤. (2008).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 및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 국제비교 분석",「교육재정경제연구」, 17(1): 61-92.
- 박소현 · 안영민 · 정규승. 2013.「중산층 측정 및 추이분석: 소득 중심으로」. 대전: 통계개발원
- 오호영 · 이정수. 2015. "청년층의 계층이동과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제10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p 284-309.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유기홍 의원실. 2013. "2011~2013학년도 서울지역 고교의 서울대 합격자 현황 분석 결과." 보도자료. 11월 19일자.
- 최은영 · 홍장표. 2014. "세대 간 직업계층의 이동성."「지역사회연구」, 22(1): 51-70.
- Chetty, R., Hendren, N., Kline, P. and Saez, E. (2014). "Where is the Land of Opportunity? The Geography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NBER Working Paper.
- Ganzeboom, Harry B. G., and Treiman, Donald J. (1996), Internationally Comparable Measures of Occupational Status for the 1988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25, 201-239.
- Krueger, A. B. (2012). "The Rise and Consequences of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Chairman,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January 12, 2012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krueger_cap_speech_final_remarks.pdf)
- OECD (2011). Social Cohesion in Shifting World. OECD Publishing.
- OECD (2014).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OECD Publishing.

제2장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국가 간 비교 분석

가톨릭대학교 **백승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한국사회의 당면한 과제로 사회통합이 전면에 떠오르고 있고, 사회통합의 문제에서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과 함께 사회적 이동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기 시작하였음. 사회적 이동성은 그 사회의 역동을 보여주며, 또한 한정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임.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이동성은 확보될 필요가 있음

계층 이동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아직까지 하향이동보다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실제 직업계층 이동의 경우 하향이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인들은 실제와 달리 지금까지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함. 그러나 2015년 한국인이 느끼고 있는 향후 계층 이동 인식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음. 열심히 교육시키면 자녀 세대의 사회 ·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열심히 노력하면 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

사회적 계층이동 가능성은 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는데, 이는 사회에 대한 불신을 높여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게 될 것임. 따라서 불평등, 낮은 계층이동 그리고 낮은 사회적 신뢰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분배 정책 및 재분배 정책의 혁신이 필요함

분배정책의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인상 등을 통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파견, 용역 등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뿌리 뽑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 정책의 혁신이 필요함. 재분배 정책의 차원에서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한 노후생활보장의 내실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증세에 대한 합의가 시급함

I 서론

1. 논의 배경

■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로 사회통합이 전면에 떠오름

- 고성장기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소득분포는 비교적 평등적이었음
  - 교육을 강조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적절히 확보된 결과였음
- 고도 성장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 집단 구분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존 사회질서의 유지가능성과 정당화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회적 불안정 요인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통합의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음
  - 현존하는 계층질서가 도덕적으로 수용되고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공평한 기회'와 '노력에 따른 보상'이 적절히 기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

■ 사회통합의 문제는 OECD, EU 등 국제기구의 논의에서도 핵심적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음

-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지속가능하며 차별 없는 성장을 위한 도구이거나, 그 자체로 사회발전의 목표가 되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음(여유진 외, 2014: 57)
- 1970년대부터 논의되었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소득 뿐 아니라 주거, 교육, 건강 등의 영역에서의 배제,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서 참여를 제약당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반대적 상황을 나타내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이러한 배제와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요소로 논의되고 있음(여유진 외, 2014: 58)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신뢰,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 사회적 규범의 공유 등 사회 조직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상호협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여유진 외, 2014: 61)

■ 사회적 이동성을 포함한 보다 확장된 형태의 사회통합 개념이 제시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사회통합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자본이 주로 이용되었음

- 이에 따른 사회통합의 측정 요소는 주로 다음과 같음(정해식 외, 2014: 99)
  - 첫째, 소득 불평등 수준으로, 발전된 사회의 불평등 개선이 빈곤 감소 등을 이룰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됨
  - 둘째, 포용의 수준으로, 구성원들이 생산적 경제활동,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고려함
  - 셋째, 구성원의 복지 수준으로, 기대수명, 문맹률 등 인간 삶의 질 수준을 고려함
  - 넷째, 사회적 자본의 수준으로, 각종 단체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정도, 구성원 간 신뢰 수준 정도를 고려함

■ 이와는 달리 OECD(2011)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과 더불어, 사회적 이동을 포함하여 사회통합의 세 축을 설정하고 논지를 전개한 바 있음

- 이 때 사회적 이동은 사회 내에서 지위를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측정할 수 있음
  - '이동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와 같은 인식적 차원의 지표는 사회조사 방법이 발전하면서

1990년대 말 이후 여러 지표체계에서 활용되고 있음

- 다만, OECD(2011)는 사회통합의 세 축이 중요하지만 나라마다 각기 강조하는 바는 다를 수 있다고 역설하였음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노르딕의 복지국가들은 정부 제도에 대한 강한 신뢰(사회적 자본)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적용을 통해 공공지출을 늘림으로써 사회적 포용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음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은 인간의 자기실현이라는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함

- 인간개발지수(HDI) 계산에 평균취학년수와 기대취학년수를 이용하는 교육지수를 포함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자기성취와 이를 통한 소득의 증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임
-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회 ·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이념형(ideal type)의 한 축에 놓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되는 사회로 이념형의 다른 한 축에는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나 중세유럽의 봉건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음

한 사회의 사회적 이동성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한 사회가 다른 사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동성 수준을 보일 수 있으며,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 있음
- 한 사회 내에서 개인의 계층적 위치가 변화는 정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므로, 과거의 사회와 비교하여 이동성 수준을 진단할 수 있음
- 이 때 사회적 이동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회 · 경제적 위치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며, 사회의 개방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됨
  - 계층적 관점에서는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함
  - 사회적 관점에서는 교육, 기술 습득, 직업 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역량을 증대하는 것을 말하며, 대체적으로 상향 이동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 현대 사회에서 사회이동의 가능성은 대부분 교육, 직업훈련을 통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 사회이동'에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며, 관련 연구도 이에 집중되었음(여유진, 2008; 김희삼, 2009; 강신욱 외, 2010; 최지은 · 홍기석, 2011; 여유진 외 2011; 김희삼, 2015)
  - 이런 연구의 주요 결과는 가정배경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었음(여유진, 2008)

사회통합이라는 대 주제 하에서 사회적 이동성 수준의 문제를 다룰 때는 몇 가지 쟁점이 형성됨

- 첫째, 한국 사회의 사회적 이동성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에 대한 것임
  - 이것은 과거 특정 시점, 이전 세대와의 상대적 비교 또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진단해볼 수 있음
- 둘째, 구성원의 인식적 차원에서 한 사회를 평가해볼 수 있을 것임
  - 이는 실제의 측정된 그 사회의 사회적 이동성 수준과 인식적 차원과의 간극을 진단하여 유의한 해석을 얻어낼 수 있음
- 셋째, 실제의 사회적 이동성 수준과 인식 수준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원인을 진단하는 것임

2. 분석의 필요성

한국의 사회 이동성 수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에서 현 상태는 양호한 수준이나, 악화의 가능성이 염려된다고 진단한 바 있음

- 안종범 · 전승훈(2008)은 부모 세대의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자녀 세대의 교육격차와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세대 간 이전 현상을 실증 분석하였음. 이들은 현존하는 교육수준의 격차 및 소득수준의 격차가 세대가 진행됨에 따라 확대될 수 있으므로, 교육수준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김희삼(2009)은 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은 국제적 기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는 고도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더 많은 상위 직종의 일자리가 만

들어졌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도 교육을 통해 이런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함. 그러나 앞으로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 김봉근 · 석재은 · 현은주(2012)는 세대 간 장기임금소득 탄력성이 0.3 근방으로 추정되어, 문헌에서 보고된 다른 나라들의 추정치에 비해 낮아 소득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 그런데 이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6년 이후로 소득 이동성이 저하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사회 이동성의 실제와 인식의 관계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구분이 가능함

- 첫째, 사회적 이동성의 실제 수준도 낮으며, 구성원들 역시 사회적 이동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임. 카스트 제도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음
- 둘째, 사회적 이동성의 실제 수준은 낮은데, 구성원들은 사회적 이동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임. Alesina and Glaeser(2004)는 미국에서 복지지출에 대한 지지가 적은 이유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높은 이동성에 대한 인식을 지적한 바 있으며, 실제 미국의 사회적 이동성 수준은 생각보다 높지 않음을 보여준 바 있음
- 셋째, 사회적 이동성의 실제 수준은 높은데, 구성원들은 사회적 이동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임. 이는 계층적 상향 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사회의 특징이며,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진 경우임
- 넷째, 사회적 이동성의 실제 수준도 높고, 구성원들도 사회적 이동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임. 이런 사회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넘치는 사회이며, 구성원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사회로서 통합된 사회의 궁극적인 모습임

[표1] 이동성의 실제와 인식

	이동성의 실제	
이동성에 대한 인식	낮은 이동성– 낮은 이동성 인식	높은 이동성– 낮은 이동성 인식
	낮은 이동성– 높은 이동성 인식	높은 이동성– 높은 이동성 인식

이 글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이동성의 실제 수준과 인식 수준을 확인해보고자 함

- 한국 사회의 이동성 수준을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 분석해보는 것이 연구의 가장 큰 목적임
- 이를 위해서 한국의 사회적 이동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그 현황을 제시하고자 함

한 사회의 이동성 수준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됨

- 사회이동의 세대 간 이동(inter-generational mobility)과 세대 내 이동(intra-generational mobility)
- 이동성의 방향에 따라 수직이동(vertical mobility)과 수평이동(lateral mobility), 상승이동(upwardly mobility)과 하강이동(downwardly mobility)으로 구분할 수 있음

Ⅱ 한국인의 계층이동 인식

1. 한국인의 계층 인식

한국인의 계층의식에서 주관적 중산층 인식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주관적 하층 인식 비율은 점증하고 있음

- 주관적 계층의식은 가구의 경제수준 뿐 아니라 자신이 생활하는 사회와의 심리적 거리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리변수로 기능함
- 실제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인 중 자신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결과로서)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층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2006년 53.4%에서 2009년 54.9%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하락 추세로 반전하여 2011년 52.8%, 2013년에는 51.4%로 나타났음
  - 같은 기간 자신을 하층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45.2%에서 42.4%로 줄었다가, 이후 45.3%, 46.7%로 증가하였음

[표2] 연도별 한국인의 주관적 계층의식 변화

구분	상		중		하		합계
	상	하	상	하	상	하	
2006	0.3	1.2	18.4	35.0	27.1	18.1	100.0
2009	0.6	2.0	20.8	34.1	24.7	17.7	100.0
2011	0.5	1.4	18.0	34.8	26.3	19.0	100.0
2013	0.4	1.5	17.7	33.7	26.3	2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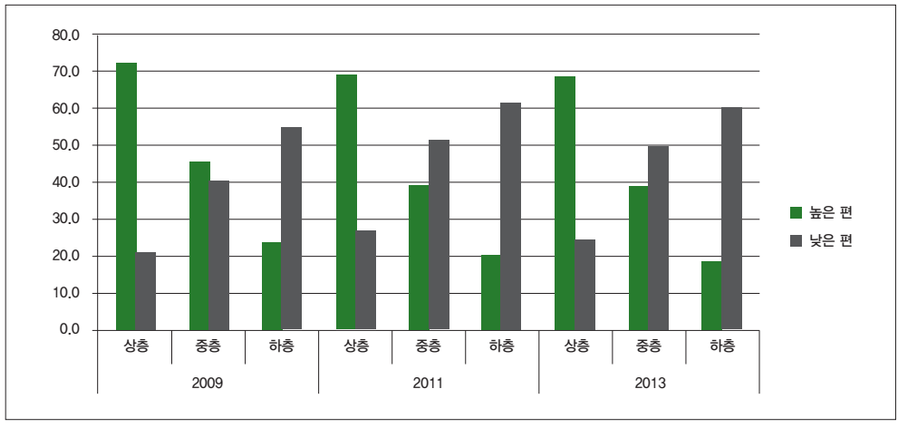
※ 주 :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2. 한국인의 계층이동 인식

계층이동 가능성 전망에서 부정적 인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계층이동 가능성은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을 이용하였음

[그림1] 계층이동 가능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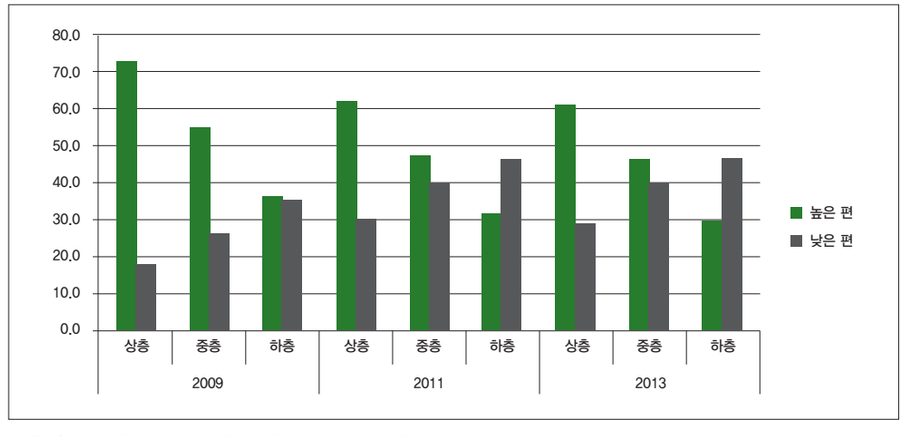
※ 주 : 1) 2009년 조사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13세 이상 인구 집단이 반영될 때, 상향이동의 긍정적 전망은 더 높아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2006년 자료 분석은 제외하였음.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 계층이동 가능성의 긍정적 전망은 줄어들고, 부정적 전망은 증가하고 있음
  - 계층이동 가능성은 노력에 따른 보상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높은 편('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의 합)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37.6%(2009년)에서, 32.3%(2011년), 31.2%(2013년)로 점차 낮아짐
  - 반대로 낮은 편('비교적 낮다'와 '매우 낮다'의 합)이라는 응답은 각각 45.6%, 54.9%, 54.2%로 나타나고 있음
- 긍정적 전망의 감소는 모든 계층(주관적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인식의 간극 역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
  - 상층에서는 72.1%(2009년), 68.8%(2011년), 68.6%(2013년)로 하락함
  - 하층에서는 23.1%(2009년), 20.1%(2011년), 18.6%(2013년)로 하락함
- 계층이동 가능성 전망에서 가장 극명한 변화를 보이는 집단은 중간층의 경우임
  -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각각 년도에서 45.9%, 39.3%, 38.9%로 감소하였음
  -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는 응답은 각각 년도에서 30.6%, 51.4%, 50.5%로 크게 증가하였음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이 늘어나고 있음

-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을 이용하였음
-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은 편으로 진단하는 비율은 2009년 48.3%에서 2011년 41.4%로 줄어들었고, 2013년에는 다시 39.6%로 줄어듦
  - 계층별로 살펴보면, 상층에 속한다는 집단의 경우에는 72.9%, 62.2%, 60.9%로 하락하고 있음
  - 중간층에 속한다는 집단은 55.2%, 47.6%, 46.5%를 보이고 있음
  - 하층에 속한다는 집단은 36.3%, 32.0%, 29.6%를 보이고 있음
-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는 부정적 인식은 2009년 29.8%에서 2011년 42.7%, 2013년 42.8%로 늘어났음
  - 계층별로 살펴보면 상층에 속하는 집단은 17.8%에서 30.1%, 29.0%, 중간층은 26.6%에서, 40.3%, 40.5%를, 하층은 35.5%에서 46.3%, 46.4%를 보였음

[그림2]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전망



※ 주 : 1) 2009년은 15세 이상 인구를, 이후로는 19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연령대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의 30대, 40대에서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전망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가장 낮고, 부정적 답변은 가장 높다는 것임
  - 이와 관련해서는 이들 세대가 실제로 취학연령대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이들은 교육 등을 통한 계층 이동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인식 중

[표3] 연령대별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진단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	비교적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19~29세	5.4	33.4	32.4	10.6	18.2
30~39세	4.3	32.6	37.4	11.5	14.3
40~49세	3.5	35.8	37.1	10.1	13.5
50~59세	3.5	38.2	33.2	9.0	16.0
60세 이상	3.1	38.3	25.4	7.6	25.6
65세 이상	3.2	37.8	23.5	7.5	28.1

※ 자료 : 통계청(2013), 사회조사.
주 :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음"

Ⅲ 사회적 이동성 국제비교 분석

1. 직업계층이동 국제비교 분석

■ 직업계층이동의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국제사회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의 2009년 사회불평등(Social Inequality) 모듈을 활용함
- 직업 계층 간, 세대 간 이동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응답자의 직업과 아버지의 직업 정보가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문항을 활용함
  - 아버지의 직업: Q15a. & b "14/15/16세일 당시, 당신의 아버님은 누구를 위해, 어떤 종류의 일을 하였는가?"
  - 응답자의 직업: Q19a & 19b "당신은 현재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가?"

■ 분석에서는 Esping-Andersen(1990)의 세 가지 복지체제를 대표하는 국가들을 포함함

-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미국, 보수주의 복지체제는 독일과 프랑스, 사민주의 복지체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또한 아시아 국가로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였음

■ 구체적인 직업계층 구분은 직업계층을 수직적 위계와 수평적 위계로 구분한 Oesch(2006, 2008)의 분류 방식을 따랐음

- 수직적 위계는 각 직업에 반영된 숙련수준을 측정하여 고숙련 직업과 저숙련 직업을 구분하기 위한 분류 기준임
- 수평적 위계는 비슷한 숙련수준을 가진 직업들에서 작업방식(work logic)의 특성에 따라 직업들을 구분하기 위한 분류 기준임

■ 이러한 Oesch(2006, 2008) 분류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서비스 경제사회는 저숙련과 고숙련의 수직적 계층 분화 뿐 아니라, 수평적 계층분화가 중간계층들 사이에서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계층구분 논의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신광영, 2008: 79-80; Oesch, 2006: 39)
- Oesch(2006)는 직업계층을 노동시장에서의 특정한 상황을 공유하는 직업 집단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경제사회의 가장 큰 특징인 '서비스업의 증가'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라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직업계층을 포착하기 위한 계층분류를 제시함
- 따라서 Oesch(2006)의 직업계층 분류는 서비스 경제사회에 적합한 직업 계층 분류를 제시해줌으로써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 이동성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

■ Oesch(2006)의 구체적인 직업계층 분류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그는 1998년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88) 네 자리 코드에 기초해서 직업계층을 15개로 구분하고 있음(표 4). 직업계층 구분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자영업자/고용주와 피용인을 구분하고, 자영업자/고용주는 다시 피용인이 5인 이상인 경우는 대규모 고용주, 피용인이 1-4인이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인 경우는 자영전문가로 분류함(표 4의 (1) 집단). 그리고 피용인이 1-4인이고 전문직이 아닌 경우는 피용인이 있는 쁘띠 부루주아로 분류하고(표 4의 (2)집단), 그 이외의 자영업은 피용인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분류함(표 4의 (3)집단)

- 둘째, 피용인 계급은 기술전문가 등 12개 계급을 ISCO-88 4자리 코드에 기초하여 분류함(표 4의 (4)-(15)). 그리고 12개의 직업계층을 숙련 수준에 따라서 전문/관리직, 준전문/관리직, 일반숙련, 저숙련으로 구분하여 수직적으로 배치함

-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층 간 수직적 이동 분석이 목적이기 때문에 Oesch(2006, 2008)의 직업계층 구분을 재구성하였음. 재분류 방식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고용주와 자영전문가, 기술전문가, 고위관리자, 사회문화전문가를 전문관리직으로 재분류함
  - 둘째, 쁘띠 부르주아와 피용인이 없는 자영자를 소상공인으로 분류하였음
  - 셋째, 기술자, 준관리자, 사회문화 준전문가를 준전문관리직으로 분류
  - 넷째, 숙련장인, 숙련사무직, 숙련서비스직을 일반숙련직로 분류
  - 다섯째, 단순기능공, 일반사무직, 일반서비스직을 저숙련직으로 분류함

[표4] 서비스경제에서의 직업계층 분류

작업방식(work logic)					
독립적(independent) 작업방식	기술적(technical) 작업방식	조직적(organizational) 작업방식	대인적(interpersonal) 작업방식		
(1) 고용주 (피용인 5인이상) 자영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	(4) 기술 전문가 (컴퓨터전문가 등)	(8) 고위 관리자 (공공서비스 행정가 등)	(12)사회문화전문가 (대학 교수 등)	전문/ 관리직	숙련도
(2) 쁘띠 부르주아 (피용인 4인이하) (레스토랑 경영자 등)	(5) 기술자 (전기기술자, 안전검사원 등)	(9) 준관리자 (소규모 기업 관리자 등)	(13)사회문화준전문가 (초등학교 교사 등)	준전문/ 관리직	
(3) 피용인이 없는 자영자	(6) 숙련장인 (목수 등)	(10)숙련사무직(비서 등)	(14)숙련서비스직 (요리사 등)	일반/ 숙련	
	(7) 단순 기능공, 농림어업관련 순종사자	(11)일반사무직(점원 등)	(15)일반서비스직 (가사 도우미 등)	낮은/ 비숙련	

※ 자료 : Oesch(2008), Hausermann and Schwander(2009: 11)

■ 본 분석에서 직업계층 이동은 다음과 같이 측정함

-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와 응답자 아버지의 직업계층 교차표를 활용하여 직업계층 이동을 측정함

-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 직업보다 응답자 직업이 왼쪽으로 이동할 경우 계층의 상승이동, 변화가 없을 경우 계층유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경우 계층의 하강 이동임

[표5] 아버지와 자식의 직업 교차표와 계층이동

응답자 / 아버지	전문관리직	준전문관리직	소상공인	숙련직	저숙련직
전문관리직	직업계층유지	↓↓↓↓↓↓↓	↓↓↓↓↓↓↓↓	↓↓↓↓↓↓↓↓	↓↓↓↓↓↓↓↓
준전문관리직	↑↑↑↑↑↑↑	직업계층유지	↓↓↓↓↓↓↓	↓↓↓↓↓↓↓↓	↓↓↓↓↓↓↓↓
소상공인	↑↑↑↑↑↑↑	↑↑↑↑↑↑↑	직업계층유지	↓↓↓↓↓↓↓↓	↓↓↓↓↓↓↓↓
숙련직	↑↑↑↑↑↑↑	↑↑↑↑↑↑↑	↑↑↑↑↑↑↑↑	직업계층유지	↓↓↓↓↓↓↓↓
저숙련직	↑↑↑↑↑↑↑	↑↑↑↑↑↑↑	↑↑↑↑↑↑↑↑	↑↑↑↑↑↑↑↑	직업계층유지

※ ↓: 계층 하강이동, ↑: 계층 상승이동

2. 직업계층 이동 분석 결과

■ 응답자 아버지의 직업계층 분포는 다음과 같음(표 6)

- 응답자 아버지의 직업계층 분포를 보면, 미국,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은 일반 숙련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프랑스, 한국, 일본은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았음

[표6] 응답자 아버지의 직업계층 분포

직업계층	미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	일본
전문관리직	20.2	14.0	10.5	17.5	12.1	3.3	5.5
준전문관리직	7.9	10.9	6.6	16.2	14.5	9.9	9.7
소상공인	22.7	17.7	61.7	21.2	25.0	68.8	42.5
일반숙련직	31.7	44.7	15.4	32.6	33.9	12.6	34.6
저숙련직	17.5	12.8	5.8	12.5	14.4	5.4	7.6

응답자의 직업계층 분포는 다음과 같음(표 7)

- 응답자의 직업계층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숙련직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일반숙련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여전히 피용인이 없거나 4인 미만 피용인을 두고 있는 자영업인 소상공인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음
- 아버지 세대의 직업계층 분포와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영업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아버지 세대에 한국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아들세대에서 그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이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산업화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음

[표7] 응답자의 직업계층 분포

직업계층	미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	일본
전문관리직	22.4	17.5	23.8	30.3	18.9	8.0	10.0
준전문관리직	19.0	23.4	25.4	26.3	24.3	19.9	14.8
소상공인	8.2	4.8	6.4	2.6	7.7	28.2	27.4
일반숙련직	30.5	38.4	29.6	31.4	28.6	28.3	37.2
저숙련직	19.9	15.9	14.9	9.5	20.5	15.6	10.7

전반적인 계층이동 현황은 다음과 같음(표 8)

- 각 국가의 세대 간 직업계층 상승, 동일, 하강이동 비율은 아래 〈표 8〉과 같음
  - 상승이동 비율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와 프랑스로 각각 46.5%와 41.9%가 아버지 세대의 직업계층보다 상승이동 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스웨덴, 미국, 독일이 각각 39.8%, 37.5%와 33.3%의 상승이동을 보였음
  - 한국은 25.4%, 일본은 19%가 상승이동 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승이동의 비율이 적었음
- 반면에 직업계층의 하강이동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으로 37.7%가 하강이동하였음. 이렇게 한국에서 직업계층의 하강이동이 큰 이유는 전문관리직 및 소상공인의 직업계층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됨(자세한 설명은 아래 직업계층별 사회이동에 대한 분석결과 참조)
  - 하강이동이 가장 적은 나라는 일본으로 20.2%가 하강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직업계층의 이동이 가장 적은 나라는 일본으로 61%가 세대 간 직업계층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독일과 한국이 각각 40.%와 37.7%로 직업계층에 변화가 없었음
- 한편 〈표 8〉에서 괄호안의 숫자는 소상공인을 제외했을 경우 직업계층의 이동을 보여줌.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했을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슷한 직업계층 이동 패턴을 보이는 반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프랑스의 순으로 직업계층 이동 패턴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음. 이들 세 나라들은 아버지 세대의 직업계층에서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았던 나라들임
  - 한국의 경우 소상공인을 제외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직업계층이동 수준은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소상공인을 포함했을 경우 아버지 세대와 동일한 직업계층을 보이는 비율이 37%였지만,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을 경우 그 비율은 16%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한국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우 아버지 세대의 직업계층을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아래 각 개별 국가들의 직업계층이동 분석결과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결국 한국사회에서 피용인 4인 미만 자영업자로 구성된 소상공인 직업계층에서의 세대 간

직업계층 이동 수준은 낮고, 피용인 5인 이상 자영업과 임금근로자들 사이에서의 직업계층 이동 수준은 매우 높아 직업계층이 이동된 비율은 84%에 달했음

[표8] 직업계층의 전체적인 이동 현황 비교

전체							
	미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	일본
상승이동	37.5 (38.8)	33.3 (34.2)	41.9 (45.1)	46.5 (47.2)	39.8 (41.4)	25.4 (33.7)	19.0 (25.2)
동일	30.9 (28.4)	40.4 (38.7)	24.1 (18.4)	29.6 (28.5)	29.9 (26.9)	36.9 (16.2)	60.8 (48.2)
하강이동	31.7 (32.8)	26.3 (27.1)	34.0 (36.6)	24.0 (24.3)	30.4 (31.7)	37.7 (50.1)	20.2 (26.7)
남성							
상승이동	36.3	35.6	44.1	49.6	44.2	30.6	24.5
동일	34.3	40.8	26.6	31.1	30.1	37.4	54.9
하강이동	29.4	24.1	29.4	19.3	25.7	32.0	20.6
여성							
상승이동	38.5	31.4	39.7	43.5	35.6	20.5	14.2
동일	28.0	40.0	21.6	28.1	29.6	36.5	66.0
하강이동	33.6	28.6	38.7	28.4	34.8	43.0	19.8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인 직업계층 이동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경우(표 9) 세대 간 각 직업계층의 이동이 없는 비율은 전문관리직 45%, 일반숙련직 40%, 준전문관리직 32%, 저숙련직 27% 순이었음
  - 전반적으로 1/3이상은 아버지 세대의 직업계층을 유지하고 있었음. 직업계층의 상승이동은 주로 아버지 세대가 저숙련직인 경우에 자식 세대에서 일반숙련직으로 이동하는 경우였으며 그 비율은 33% 수준이었음. 두 계단 이상 직업계층이 상승하거나 하강한 경우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음
- 미국의 전체적인 직업계층이동은 상승이동이 하강이동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전문관리직의 하강이동보다는 저숙련직의 상승이동 폭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표9] 직업계층의 이동 현황(미국)

응답자 / 아버지	전문관리직	준전문관리직	소상공인	일반숙련직	저숙련직
전문관리직	45.27	23.46	7.73	16.25	7.29
준전문관리직	25.37	31.87	4.48	23.06	15.22
소상공인	21.11	20.76	12.46	21.83	23.84
일반숙련직	19.53	15.40	6.68	39.68	18.71
저숙련직	17.12	15.37	7.20	18.71	26.99

- 독일의 경우(표 10) 일반숙련직, 전문관리직, 준전문관리직, 저숙련직 순으로 계층이동이 없는 비율이 높았음. 전반적으로 아버지 세대의 직업계층을 유지하고 있었음
  - 저숙련직의 경우 일반숙련직으로의 직업계층이동 비율이 40%에 달했음
- 독일의 경우 전체적인 직업계층이동은 상승이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준전문관리직의 하강이동이 적고 저숙련직에서의 상승이동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됨

[표10] 직업계층의 이동 현황(독일)

응답자 / 아버지	전문관리직	준전문관리직	소상공인	일반숙련직	저숙련직
전문관리직	46.85	32.17	3.50	13.99	3.5
준전문관리직	17.86	44.64	4.46	27.68	5.36
소상공인	22.65	19.34	16.02	30.39	11.6
일반숙련직	10.92	20.31	3.06	49.13	16.59
저숙련직	7.63	20.61	0.76	38.17	32.82

- 프랑스의 경우(표 11) 전문관리직의 직업계층 유지 비율이 60%에 달한다는 점과 소상공인의 직업유지 비율이 독일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직업의 계층유지 패턴은 독일과 유사했음
  - 아버지 세대가 저숙련직인 경우 아들 세대에서 일반숙련직으로 직업계층이 상승하는 비율이 52%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도 독일과 차이라 할 수 있음

[표11] 직업계층의 이동 현황(프랑스)

응답자 / 아버지	전문관리직	준전문관리직	소상공인	일반숙련직	저숙련직
전문관리직	57.64	21.81	1.58	15.59	3.38
준전문관리직	35.91	43.11	2.19	13.53	5.26
소상공인	15.08	21.57	12.49	32.35	18.52
일반숙련직	17.07	20.70	2.09	45.91	14.23
저숙련직	6.84	8.34	1.21	51.89	31.73

- 노르웨이의 경우(표 12) 소상공인과 저숙련직을 제외하면 30% 이상이 아버지 세대의 직업계층 유지를 경험하고 있었음
  - 특히 전문관리직의 경우 직업계층 유지비율이 51%로 높았음. 소상공인은 전문직과 준전문직으로 직업계층 상승이동을 경험하거나 일반숙련직으로 직업계층 하강이동을 경험하고 있었음. 저숙련직은 바로 한 단계 상위 직업계층이 일반숙련직으로 40% 가까이가 직업계층 상승이동을 경험하고 있었음

[표12] 직업계층의 이동 현황(노르웨이)

응답자 / 아버지	전문관리직	준전문관리직	소상공인	일반숙련직	저숙련직
전문관리직	51.35	28.65	0.00	17.84	2.16
준전문관리직	33.92	30.41	1.75	29.82	4.09
소상공인	38.84	21.88	7.14	22.77	9.38
일반숙련직	21.80	29.07	2.62	37.79	8.72
저숙련직	21.21	21.97	3.03	39.39	14.39

- 스웨덴의 경우(표 13) 미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와 달리 전문관리직의 직업계층 유지 비율이 39% 수준으로 낮았음
  - 스웨덴에서 아버지 세대가 전문관리직이었던 경우, 아들 세대는 주로 준전문관리직이나 일반숙련직으로 직업계층이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3] 직업계층의 이동 현황(스웨덴)

응답자 / 아버지	전문관리직	준전문관리직	소상공인	일반숙련직	저숙련직
전문관리직	38.79	27.59	4.31	19.83	9.48
준전문관리직	26.62	31.56	5.04	21.58	15.11
소상공인	20.08	22.18	15.90	22.18	19.67
일반숙련직	13.58	25.00	5.86	36.42	19.14
저숙련직	13.04	21.01	5.07	31.88	28.99

- 한국의 경우(표 14) 스웨덴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직업계층 유지비율이 스웨덴의 두 배 이상이었음
- 전반적으로 아버지 세대의 전문관리직에서는 준전문관리직, 소상공인, 일반숙련직으로의 직업계층 하강이동이 골고루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저숙련직에서 일반숙련직, 준전문관리직, 소상공인으로의 직업계층 상승이동도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

[표14] 직업계층의 이동 현황(한국)

응답자 / 아버지	전문관리직	준전문관리직	소상공인	일반숙련직	저숙련직
전문관리직	41.67	22.92	12.50	16.67	6.25
준전문관리직	9.03	40.97	12.50	27.78	9.72
소상공인	6.08	16.43	35.96	25.70	15.84
일반숙련직	7.61	19.02	13.04	42.39	17.93
저숙련직	3.80	20.25	16.46	32.91	26.58

- 일본의 경우(표 15) 직업계층의 유지 비율이 매우 높았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숙련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직업에서 계층 유지비율이 60% 전후로 매우 높았음
  - 저숙련직의 직업계층 유지비율도 41% 수준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전체 직업계층에서 일본의 사회 이동성 수준은 매우 낮음

[표15] 직업계층의 이동 현황(일본)

응답자 / 아버지	전문관리직	준전문관리직	소상공인	일반숙련직	저숙련직
전문관리직	64.58	12.50	0.00	16.67	6.25
준전문관리직	4.71	64.71	8.24	20.00	2.35
소상공인	7.82	7.55	57.14	18.87	8.63
일반숙련직	4.30	9.27	8.28	67.88	10.26
저숙련직	6.06	12.12	12.12	28.79	40.91

직업별로 직업계층의 상승, 유지, 하강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전문관리직의 경우 하강이동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61%), 한국(58%), 미국(55%) 순이었음
- 준전문관리직의 경우 상승이동 비율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36%), 노르웨이(34%), 스웨덴(27%) 순이었고, 하강이동 비율이 높은 나라는 한국(50%), 미국(43%), 스웨덴(42%) 순이었음
- 소상공의 경우 상승이동은 노르웨이(61%), 스웨덴/독일/미국(42%) 순이었고, 하강이동 비율은 프랑스(51%), 미국(46%), 독일/스웨덴/한국(42%) 순이었음
- 일반숙련직의 경우 스웨덴(19%), 미국(19%), 한국(18%) 순으로 상승이동 비율이 높았고, 하강이동 비율은 노르웨이(53%), 스웨덴(44%), 미국(42%) 순이었음
- 저숙련직의 경우 상승이동 비율은 노르웨이(86%), 한국/미국(73%), 스웨덴(71%) 순이었음
- 앞서 전체적인 직업계층이동에서 살펴보았듯이, 하강이동의 비율이 가장 큰 순서는 한국이 38%, 프랑스가 34%였는데, 그 이유는 상위직업계층인 전문관리직, 준전문관리직, 소상공인직업계층에서 하강이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숙련직 및 저숙련직에서 상승이동 비율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됨
- 전반적으로 전문관리직에서 직업계층의 유지 비율이 높았고, 저숙련직에서의 직업계층 유지비율은 낮았음. 스웨덴의 경우 특이한 점은 전문관리직에서의 직업계층 유지비율 뿐 아니라 전체 직업계층에서 유지비율이 높지 않았음. 이는 직업계층 간 이동이 활발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한국과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국가는 미국과 독일이었음. 다만 한국은 소상공인의 직업계층 유지비율이 높다는 점이 이들 국가와 다른 점임

[표16] 직업별 계층이동현황

국가	계층이동	전문관리직	준전문관리직	소상공인	일반숙련직	저숙련직
미국	상승	0	25.37	41.87	18.71	73.0
	유지	45.27	31.87	12.46	39.68	27.0
	하강	54.73	42.76	45.67	41.61	0.0
독일	상승	0	17.86	41.99	16.59	67.2
	유지	46.85	44.64	16.02	49.13	32.8
	하강	53.16	37.5	41.99	34.29	0.0
프랑스	상승	0	35.91	36.65	14.23	68.3
	유지	57.64	43.11	12.49	45.91	31.7
	하강	42.36	20.98	50.87	39.86	0.0
노르웨이	상승	0	33.92	60.72	8.72	85.6
	유지	51.35	30.41	7.14	37.79	14.4
	하강	48.65	35.66	32.15	53.49	0.0
스웨덴	상승	0	26.62	42.26	19.14	71.0
	유지	38.79	31.56	15.9	36.42	29.0
	하강	61.21	41.73	41.85	44.44	0.0
한국	상승	0	9.03	22.51	17.93	73.4
	유지	41.67	40.97	35.96	42.39	26.6
	하강	58.34	50	41.54	39.67	0.0
일본	상승	0	4.71	15.37	10.26	59.1
	유지	64.58	64.71	57.14	67.88	40.9
	하강	35.42	30.59	27.5	21.85	0.0

3.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의 국제비교 분석

앞에서는 실제 계층이동을 살펴보았으며, 이하에서는 계층이동 인식을 살펴보고자 함

분석에 활용된 ISSP(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문항은 다음과 같음

- "당신의 현재 직업(만약 현재 직업이 없다면 가장 마지막의 직업)과 당신이 14/15/16세일 무렵 당신 아버지의 직업을 비교한다면, 당신의 직업 수준은 어떠합니까?"(ISSP 1999, V74; ISSP 2009, Q11)
  - 상향이동[1]은 이 중 '매우 높은 편', '높은 편'의 합계 비율임
  - 하향이동은 이 중 '낮은 편', '매우 낮은 편'의 합계 비율임
  - 무직 및 무응답 비율은 전체 비율에 포함하였음

1999년과 2009년 기간 중 상향이동에 대한 인식과 하향이동에 대한 인식이 모두 증가하였음

- 해석에 있어서는 국가 사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인식 수준에 대한 질문임을 고려해야 함

- 2009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회이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프랑스로 70%의 사람들이 부모의 직업 계층과 자신의 직업 계층 간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음
  - 프랑스는 상향이동은 50.8%로 나타났으며, 하향이동은 19.3%로 나타났음

- 한국과 일본은 독일과 더불어 세대 간 직업 계층의 변화 정도가 낮은 편으로, 이들 세 국가는 각각 61%, 61%, 56%가 직업 계층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상향이동이 34.9%, 하향이동이 27.1%인데 비해서, 일본은 상향이동은 18.3%, 하향이동은 43.6%에 이르고 있음
  - 앞 서 직업계층의 이동에서는 한국의 상승이동보다 하강이동의 비율이 높았음을 고려하면, 인식 수준에서는 실제와 달리 한국인들은 상향이동에 대한 동의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와는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직업계층의 경우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의 비율이 대체로 비슷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식 수준에서는 하향이동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인들의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1) 여기서는 인식 수준에 대한 것이므로, 상승이동과 하강이동 대신에 상향이동과 하향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표17] 직업계층 이동에 대한 인식

구분		미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	일본
1999	상향이동	40.6	32.5	52.7	39.9	34.2		
	하향이동	22.2	14.7	18.9	22.2	23.9		
2009	상향이동	43.2	36.2	50.8	43.9	42.1	34.9	18.3
	하향이동	26.0	20.9	19.3	21.8	21.2	27.1	43.6

Ⅳ 소득불평등, 사회적 이동성 그리고 사회통합[2)]

1. 소득불평등과 사회 이동성의 관계

■ 적절한 수준의 갈등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그러므로 발생한 갈등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지 또한 사회의 역량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함
- 이재열 외(2014)는 잠재적 갈등소지와 사회통합 역량으로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하였음
  - 이 때 잠재적 갈등소지에는 경제자원의 양극화, 사회자원의 양극화, 이념의 양극화를, 사회적 통합역량에는 체계 역량, 생활세계 역량, 규범 역량을 이용하였음
  - 이용한 지표는 잠재적 갈등소지에서 지니계수, 불신비율 등을, 사회적 통합 역량에서 공공교육지출, 공적사회지출, 투표율, 제도투명성 등을 이용하였음
- 정영호 · 고숙자(2014)는 갈등요인과 갈등관리를 통해서 사회갈등지수를 계산하였음
  - 갈등요인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소득불평등, 소득분포, 인구밀집도 등을 이용하였으며, 갈등관리는 정부효과성 등을 이용하였음

■ 〈표 18〉과 〈표 19〉는 각 국의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과 실제의 소득분배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2) 본 장의 주요 내용은 "여유진 · 정해식 외(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제3장 사회 이동성 수준의 국제 비교"에 게재 예정인 원고의 일부임을 미리 밝힌다

-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은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는 인식이 66.5%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며, 프랑스와 독일, 한국은 91.0%, 89.6%, 90.2%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대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일본은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60.7%, 73.1%, 77.9%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편임
  - 미국의 경우에는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에 대한 '매우 동의' 비율이 29.4%에 그치고 있다는 특징도 있음
- 실제 소득격차 수준을 지니계수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379로 가장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뒤를 일본, 한국, 프랑스가 잇고 있음
-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감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990년대 이후 미국 사회의 사회적 이동성 수준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음

[표18] 각국의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

구분		미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	일본
1999	합계	61.8	79.2	86.0	71.5	70.0		63.8
	매우 동의	23.3	28.3	59.4	22.1	28.8		35.6
	동의	38.4	50.9	26.5	49.4	41.2		28.2
2009	합계	66.5	89.6	91.0	60.7	73.1	90.2	77.9
	매우 동의	29.4	52.4	68.9	12.0	32.2	46.5	43.1
	동의	37.1	37.2	22.1	48.7	40.9	43.7	34.7

※ 주 : 전체 응답자 중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의 합산 비율임
자료 : ISSP, 1999 & 2009

[표19] 각국의 소득분배 수준– Gini 계수

년도	미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	일본
1999[1)]	.354	.259	.284	.261	.243		.337
2009	.379	.288	.293	.245	.269	.314	.336

※ 주 1)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의 경우는 2000년 기준 자료를 활용함
자료: OECD, 2015. Income distrib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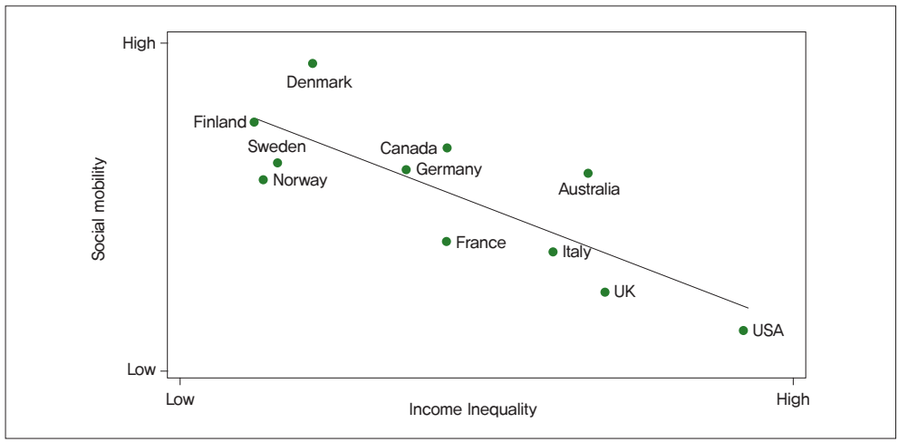
소득격차에 대해 실제와 인식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음

- 한 사회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구성원의 집합적 가치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는 사회통합의 과정과 관련됨
- Alesina and Glaeser(2004)는 재분배와 소득 이동성에 대한 믿음과 관련하여, 이데올로기적 믿음이 먼저 형성되어 복지국가를 결정하였는지, 이데올로기 자체가 정치적 행위자들이 만들어낸 도구이며 복지국가의 부산물로 볼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그들의 결론은 각 사회에서 성공한(집권한) 정치적 행위자 집단의 성공에 따라 시각차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임

보다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이동성이 낮게 나타남

- Wilkinson and Pickett(2009)는 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불평등과 사회 이동성의 관계를 분석하였음
  - 소득 이동성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아버지 소득과 그 아들이 30세가 되었을 때 소득의 상관관계로 확인하였음
- 분석 결과 8개의 국가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사회 이동성과 소득불평등의 상관관계는 매우 강하게 나타났음
  - [그림 3]은 소득 차이가 큰 국가에서 사회 이동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줌
  - 일반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인 미국은 8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사회 이동성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에 덴마크, 핀란드 등은 높은 사회 이동성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3] 소득불평등과 사회 이동성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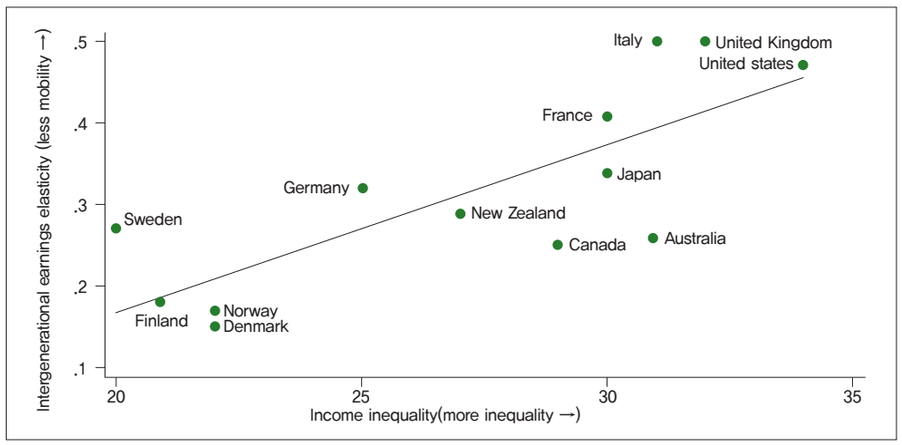
※ 자료 : Wilkinson, R and Kate Pickett, 2009, p.160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대물림의 관계는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Corak(2013)은 1960년대 초 · 중반, 1990년대 중 · 후반 부모와 자식 간의 소득탄력성 정도를 이용하여 설명하였음
  - 소득탄력성은 회귀식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계산하였으며, 부모의 소득이 1% 상승할 때 아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를 분석하였음
- 분석에 따르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와 같은 국가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성인 자녀의 소득 수준과의 관계가 약했음
  - 이들 국가에서는 아버지의 경제적 수준의 장점이나 단점이 아들에 미치는 영향이 1/5 이하였음
-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점 또는 단점의 약 50% 수준이 아들에게 영향을 끼쳤음
  - 미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5로 나타나서 캐나다의 2배에 이르렀음
- 다만, 이 때의 소득탄력성이라는 것은 고소득 부모에서 저소득 부모로, 저소득부모에서 고소득 부모로의 이전을 모두 평균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질 수 있음

- Corak(2013)은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서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가지는 임금 프리미엄으로 발생한다고 하였음
  - 즉, 이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높고 상대적으로 임금 프리미엄을 가지는 쪽에서 발생한다고 하였음

[그림4] 위대한 캐츠비 곡선(: 높은 불평등은 낮은 세대 간 이동성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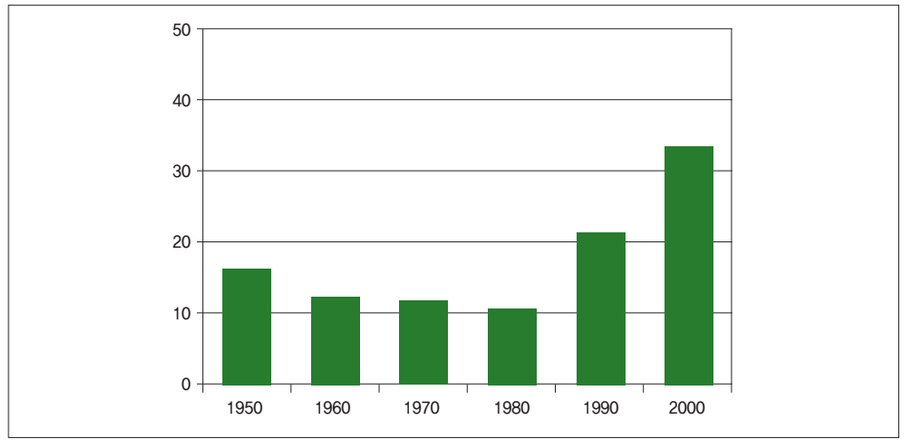
※ 주 : 소득불평등도는 Gini 계수로 측정되었으며, 세대간 소득탄력성(intergeneraional earnings elasticity)는 t 세대와 t-1 세대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추정함

자료 : Corak, 2013, p.82

■ 미국의 경우 사회 이동성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로서, 성장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주로 본보기가 되는 경우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그림 5]는 미국의 사회 이동성 수준을 시기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1980년대까지 사회적 이동성 수준은 높아지고 있었으나, 그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세로축은 부모의 소득이 자식의 소득을 설명하는 정도로, 높을수록 사회 이동성이 낮은 것을 의미함
- 1980년대 또는 1990년대에는 부모가 소득 하위 5분위에 속한 경우에 자식이 소득 하위 5분위에 속하는 경우(반대로 부모가 소득 상위 1분위에 속한 경우는 자식이 소득 상위 1분위에 속하는 경우)가 36%로 나타났으며, 대신 중간층에서는 소득 이동성이 높았음

[그림 5] 미국의 사회적 이동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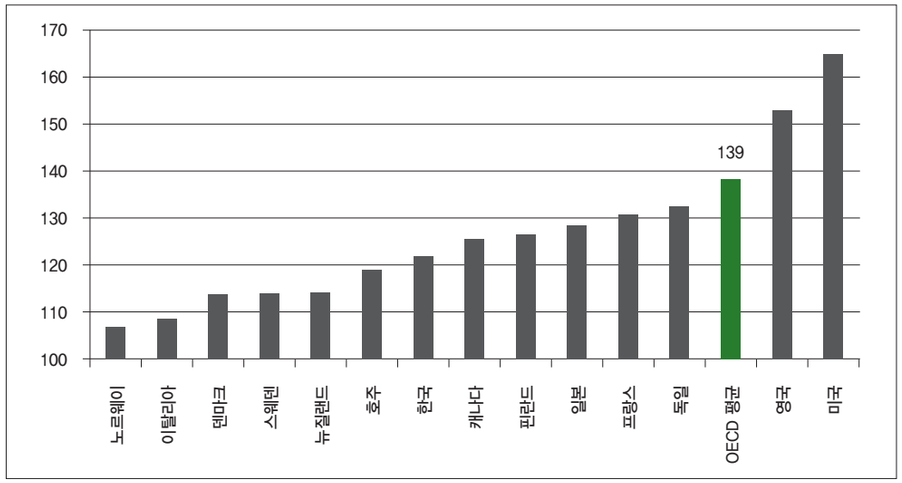
※ 주 : 수직축은 아들의 소득 중 아버지의 소득 수준으로 설명되는 비율을 말함

자료 : Mishel, Bernstein and Allegretto, 2007, Wilkinson and Pickett, 2009, p.161(재인용)

■ 사회적 이동성에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의 경제적 보상이 높은 국가에서 보다 문제가 됨

- [그림 6]은 OECD 주요 국가의 대학교육 수료자의 상대 임금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영국, 미국의 경우 대학 교육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이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보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교육성취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면,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의 간극이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음

[그림 6] 대학졸업자의 임금 프리미엄



※ 주 : 대학교육 이전 단계 교육자의 평균소득을 100으로 한 상대 비율임
자료 : OECD, 2011. Education at a Glace, p. 148을 이용함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교육 성취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임

- 한국은 그간 평등주의적 교육기회 제공에 따라 교육 성취의 효과를 골고루 나눠왔던 사회였음

2. 사회적 이동성과 사회통합

한국의 사회신뢰 수준은 연령에 따라 U자 커브를 그리고 있음

- 19–29세 집단의 신뢰수준 평균값은 4.76, 30–39세 집단은 4.53, 40–49세 집단은 4.70, 50–59세 집단은 4.81, 60–75세 집단은 4.89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 사회에서 신뢰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30–39세 집단이며, 이어 40–49세 집단의 신뢰수준이 낮음
  - 이하에서 계층이동 인식과 사회신뢰 수준 인식의 관계를 살핌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른 신뢰수준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임

[표20] 연령집단별 사회신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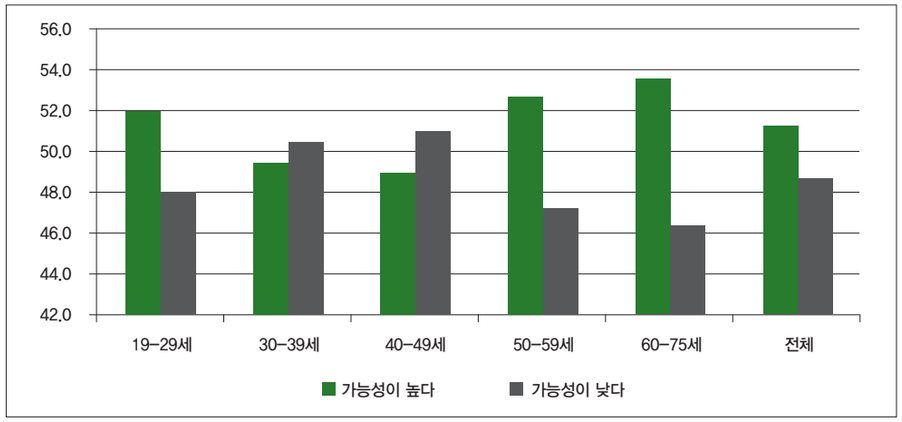
		사회 신뢰 수준				
		신뢰하기 힘들다	보통	신뢰할 수 있다	합계	평균값
연령집단	19–29세	23.6	59.5	16.8	100	4.76
	30–39세	25.2	63.3	11.5	100	4.53
	40–49세	25.6	59.2	15.2	100	4.70
	50–59세	22.4	61.0	16.5	100	4.81
	60–75세	20.9	61.0	18.2	100	4.89
	계	23.6	60.8	15.6		4.73

※ 주 : 1)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믿을 수 없다'(0)~ '매우 믿을 수 있다'(10)으로 측정하였음
2) '신뢰하기 힘들다'는 0–3점으로 응답한 경우, 보통은 4–6점으로 응답한 경우, 신뢰할 수 있다는 7–10점으로 응답한 경우로 구분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우리 사회의 세대 내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30~39세 집단, 그리고 40~49세 집단이 낮게 진단하고 있었음

- 이는 앞서 2013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와 거의 동일함
- 30–39세 집단은 노력에 따른 성취의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49.5%였으며, 40–40세 집단은 이 비율이 49%였음
  - 19–29세 집단은 52%, 50–59세 집단은 52.7%, 60–75세 집단은 53.6%로 계층 이동인식에서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7] 세대 내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 주 : 1)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물었음
2) '매우 높다' 또는 '약간 높다'고 한 경우 '가능성이 높다'로, '약간 낮다', '매우 낮다'의 경우 '가능성이 낮다'로 처리하였음
3) '모르겠다' 응답자를 제외하고 비율을 계산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세대 내 사회적 이동성이 높다고 응답하는 사람에게서 신뢰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사회의 개방도, 역동에 대한 믿음은 신뢰수준과 관련됨을 알 수 있음
- 세대 내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를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27.7%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세대 내 계층이동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응답 비율이 38.7%로 평균인 23.6%보다 높았음

[표 21] 세대 내 계층이동 인식과 사회신뢰 수준

		사회 신뢰 수준			
		신뢰하기 힘들다	보통	신뢰할 수 있다	합계
세대내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매우 높다	22.9	49.4	27.7	100
	약간 높다	20.2	62.5	17.3	100
	약간 낮다	21.2	64.5	14.3	100
	매우 낮다	38.7	49.2	12.1	100
	모르겠다	31.3	61.6	7.1	100
	평균	23.6	60.8	15.6	

※ 주 : 1)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물었음
2) 사회신뢰 수준의 측정은 위 표 20과 같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마찬가지로 사회계층의 상향 이동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는 집단에서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본인이 15세 무렵 가족의 사회 계층과 현재의 계층을 비교할 때, 상향 이동한 집단에서는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18.4%로 평균인 15.6%보다 높았음
- 반대로, 하향 이동한 집단에서는 신뢰하기 힘들다는 응답의 비율이 31.2%로 평균인 23.6%보다 높았음

[표 22] 세대 간 계층이동 인식과 사회신뢰 수준

		사회 신뢰 수준			
		신뢰하기 힘들다	보통	신뢰할 수 있다	합계
세대 간 계층 이동	상향 이동	23.2	58.4	18.4	100
	계층 유지	21.1	63.5	15.5	100
	하향 이동	31.2	55.0	13.9	100
	평균	23.6	60.8	15.6	

※ 주 : 1) 사회계층은 최하층을 1로, 최상층을 10으로 하여 어디에 속하는지를 물었음
2) 상향 이동은 15세 무렵 가족의 사회계층과 현재의 사회계층의 차가 2층 이상 높아진 경우를, 계층 유지는 1계층 상향 ~ 1 계층 하향을, 하향 이동은 2계층 이상 낮아진 경우로 계산하였음.
3) 사회 신뢰 수준은 위 표 20과 같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높은 사회적 이동성 인식 및 실태는 높은 사회신뢰 수준으로 나타남

-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과 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세대 내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사람의 신뢰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짐(모형1)
  - 세대 내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과 '약간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그러나 '약간 낮다',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집단에는 사회신뢰 수준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집단의 경우 10점으로 평가하는 신뢰점수가 1.06점 낮음

- 연령과 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계층의 상향이동을 경험한 사람에 비해서 하향이동을 경험한 사람의 신뢰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짐(모형 2)

[표 23] 사회신뢰 수준의 설명요인으로서 사회이동 인식

변수	모형1		변수	모형2	
연령집단	0.080	***	연령집단	0.089	***
로그.소득	0.116	**	로그.소득	0.129	**
사회이동 인식(매우 높다=0)			사회계층 이동(상향=0)		
약간 높다	−0.199		유지	0.032	
약간 낮다	−0.330	*	하향이동	−0.286	**
매우 낮다	−1.058	***			
모르겠다	−0.848	***			
상수	4.220	***	상수	3.782	***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V 결론

■ 사회통합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은 두 차례의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가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임
-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과 더불어 사회적 이동이 중요함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이동을 세대 간 실제 직업계층의 이동과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의 실제 직업계층을 분석한 결과, 한국 사회의 세대 간 실제 직업계층 이동은 상승이동이 25%, 하향이동이 38%로 하향이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직업계층 이동은 상승이동 수준이 낮고, 하향이동 수준이 높았음
- 반면에 아버지의 직업과 비교한 주관적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실제 직업계층 이동과 다르게 나타났음.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상향이동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5%, 하향이동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7%였음

- 실제 직업계층이동과 계층이동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사이에는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불일치는 한국인들이 지금까지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그러나 젊은 세대일 수록 향후 세대 내 계층이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고 있음

- 30~50세의 절반 이상이 한국 사회의 세대 내 계층 이동성이 낮다고 응답하고 있음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 사회의 사회적 계층이동에 대해 한국인들은 실제와 인식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계층이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음

결국,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사회적 이동성 수준이 낮고, 사회적 이동성 수준이 낮은 나라들에서 사회적 신뢰수준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사회의 미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악화 일로에 있으며, 이는 사회적 이동성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낮아진 사회적 이동성은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을 낮춤으로써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현 시점은 높은 불평등 수준, 낮은 사회적 이동성 그리고 낮은 사회적 신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다양한 사회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임

우선적으로 필요한 노력은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임

- 불평등을 해소는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함. 하나는 분배 정책 차원에서의 불평등 해소 노력이 필요하며, 다음으로는 재분배 정책 차원에서의 불평등 해소 노력이 필요함
- 분배 정책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 정책적 노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불법 파견 등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차단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한국 사회의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함
- 재분배 정책 차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함
  - 예를 들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될 필요가 있음
  - 사회안전망은 실패에 대한 최후의 지지대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의 성장동력, 활력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 재분배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재원 확보가 중요함
  - 사회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함.
  -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복지지출, 이를 위한 세출구조 조정이 비생산적이라는 판단을 버려야 하며,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증세 논의도 필요함

참고문헌

- 강신욱, 이병희, 장수명, 김민희. 2010.『고용、복지、교육연계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방안 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 김봉근, 석재은, 현은주. 2012.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추세.”「노동경제논집」35(2): 25-41.
- 김희삼. 2009.『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김희삼. 2015.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KDI Focus」54: 1-8.
- 박병영, 김미란, 한준, 김기헌, 류기락. 2008.『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 1943-1955년 출생 집단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백승호, 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21집 2호, pp.57-90.
- 백승호, 2015. 성인기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이중구조. in 안상훈 등. 한국 사회의 이중구조와 생애주기적 불평등. 집문당.
- 신광영, 2008. 서비스 사회의 계급과 계층구조. 신광영, 이병훈 외. 서비스 사회의 구조변동. 한울
- 안종범, 전승훈. 2008. “교육 및 소득수준의 세대간 이전.”「재정학연구」1(1): 121-144.
- 여유진, 김문길, 장수명, 한치록. 2011.『계층구조 및 사회 이동성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김문길,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강규형, 김병철, 은재호, 전홍규, 정재훈. 2014.『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서울: 국민대통합위원회.
- 여유진. 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보건사회연구」28(2): 53-80.
- 이재열, 조병희, 장덕진, 유명순, 우명숙, 서형준. 2014.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한국사회정책」21(2): 113-149.
- 정영호, 고숙자. 2014.『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지은, 홍기석. 2011.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 분석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사회보장연구」, 27(3): 143-163.

- Alesina, A., and Glaeser, E. L. 2004.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A world of differen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Corak, M. 2013.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3): 79-102.
- Esping-Andersen, G. 1993. Changing Classes: Stratification And Mobility In Post-Industrial Societies. Sage: London.
- Goldthorpe, J. H.(2000). On Sociology : Numbers, Narratives, And The Integration Of Research And Theory. Oxford
- Gallie, D. W., Cheng, M. Y. & Tomlinson, M. 1998. Restructuring the employment relationship
- Mishel, L., Bernstein, J.andAllegretoo, S. 2007. The State of Working America 2006/2007. Economic Policy Institute.
- OECD. 2011.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 OECD. 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5. ""Income distribution",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data-00654-en. (Accessed on 04 September 2015).
- Oesch,D. 2006. Redrawing the class map: stratification and institutions in britain, germany, sweden and switzerl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Oesch,D. 2008. Remodelling class to make sense of service employment: evidence for Britain and Germany. Paper presented at the CREST-ENSAE Seminar of Sociology in Paris.
- Standing, G. 2009. Work after globalization: building occupational citizenship . UK: Cheltenham.
- Wilkinson, R. G. and Pickett, K. 2009. (The)Spirit level :why more equal societies almost always do better. London: Allen Lane.
- Wright, E. O. 1989. The debate on classes. London: Verso.